

**김정일시대 통일전선전술의
추진양상과 경찰의 대응방안**

**김정일시대 통일전선전술의
추진양상과 경찰의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선임연구관 송 경 호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4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0
제2장 통일전선전술의 특징과 적용유형	12
제1절 통일전선전술의 개념	12
제2절 통일전선전술의 유래	18
제3절 통일전선전술의 전개형식	24
1. 하층통일전선	24
2. 상층통일전선	25
제4절 통일전선전술의 실천적 적용유형	28
1. 서유럽에서의 반과소인민전선	29
2. 중국의 반제민족통일전선	31
3.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33
제3장 북한 통일전선전술의 본질	35
제1절 통일전선전술의 목적	35
제2절 통일전선전술의 특징	37
제3절 통일전선전술의 형성원칙	39
제4절 통일전선전술의 강화방안	41

제5절 통일전선전술의 문제점 및 한계	48
제4장 대남 통일전선전술의 추진양상	52
제1절 북한의 통일전선기관	54
1. 대남통일전선기관	55
2. 대외통일전선기관	61
제2절 대남통일전선전술의 추진 실태	63
1. 협상제외에 의한 통일전선전술	63
2. 연방제통일방안에 의한 대남통일전선전술	71
3. 지하당 구축에 의한 대남통일전선전술	77
제5장 결론	90
참 고 문 헌	9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북한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전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목표로 대남혁명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 통일전선전술을 집요하게 추진하여 왔다.

최근(2009년 2월)에는 기존 대남공작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 작전부와 35호실, 인민무력부 정찰국을 통폐합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인민무력부에 정찰총국을 신설하였다. 1)

대남통일전선전술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최종 목적은 대한민국의 현정권을 타도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식 통일을 달성 하려는데 있다. 당 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²⁾고 규정하였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남조선 인민들을 적극 지원할 것” 이라고 호

1) 현재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이 대남·대외공작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은 직제 상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산하에 편제되어 있으나 대남공작기관의 특성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직보 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정찰총국장은 김정일의 최측근이며 대남통으로 알려진 김영철 상장이 맡고 있다. 정찰총국은 총 6개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국은 간첩양성 및 교육기관 운영업무를, 2국은 암살, 폭파, 납치 업무를, 3국은 공작 장비 개발업무를, 5국은 대남 및 해외정보 수집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찰국 소속으로 4개의 저격여단, 5개 정찰대대, 907부대, 38항공육전여단 등이 있다.

2)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북한연구소, 1999, 1141면.

언 장담하면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언론인, 지식인, 종교인 등을 규합한 통일전선 형성을 노골적으로 전개하여 왔다.

더구나 북한은 7천만 겨레가 그토록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관계 발전을 외면한 채 민족공동체의 회복 보다는 소위 남한혁명을 위한 혁명과정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전선전술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한국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을 부추이고 이를 조장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대북 적대감 해소, 한국 국민들의 안보의식 희석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햇볕정책 추진과 2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대남정책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전략 및 대남통일전선전술에 관한 이해와 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대남통일전선전술에 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선행되어 왔으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 동 분야의 연구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자들 중에는 통일전선전술의 일반적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통일전선전술의 진위를 왜곡 전달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통일전선전술 문제를 공산주의자들이 규정한 개념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임의적으로 개념을 규정하고, 통일전선전술을 전략적 차원과 전술적 차원으로 구분하는 등 혼돈을 빚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의 통일전선전술의 개념과 유형, 특징, 적용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북한이 통일전선전술을 어떻게 도입하였으며 통일전선전술의 전개 유형과 특징,

본질적 성격 등을 규명하여 통일전선전술의 문제점 및 경찰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통일전선전술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용어의 혼돈을 바로잡고자 한다.

둘째,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의 통일전선전술의 형태와 특징을 서유럽에서의 반파쇼인민전선, 중국의 반제민족전선, 남베트남의 민족해방전선으로 나누어 그 적용유형을 분석 평가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통일전선전술의 본질과 김정일 시대 통일전선전술의 추진양상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한다.

넷째, 향후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의 전개양상을 전망하고 이를 저지해 나가기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대남통일전선전술에 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연구자에는 강인덕, 김용규, 오일환, 강성윤, 이상호, 박승춘, 유동열, 최세경, 이성구, 김해호, 양점석 등을 들 수 있다.

강인덕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나타난 통일전선의 유형과 북한의 통일전선전술과의 비교연구”³⁾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있어서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전략적 측면과 전술적인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통일전선전략이라고 말할 때는 공산당이 어떤 비공산세력과 손잡고 누구를 타도하려는가에 대한 혁명의 동력과 목표 및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고, 통일전선전술이라고 할 때는 누구와 어떻게 손잡고 어떤 방법으로 비공산세력의 도움을 받아 목적을 달성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통일전선은 시대적·공간적 조건에 따라 전략적 동맹 내지는 전술적 제휴 개념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김용규는 “북한의 통일전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 통일전선전술의 발전 과정과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대남·대내·대외적 통일전선으로 구분하여 면밀히 분석하였다.

특히 지하당 통일전선전술을 중점으로 연구하면서 “지하당은 대한민국 사회에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북한노동당의 지하조직으로 남한사회의 공산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 지하조직을 말하며 남한혁명의 현 전략단계에서 전술적 단계를 결정적 시기와 준비기로 나누어 기술하고”⁴⁾ 통일전선의 사업원칙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통일전선사업에서 당이 합법적으로 존재 할 수 없는 지하당의 경우에

3) 강인덕,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나타난 통일전선의 유형과 북한의 통일전선전술과의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76, 2면.

4) 김용규, “북한의 통일전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7, 19면.

는 합법당의 원칙과는 달리 특별히 강조되는 원칙이 있다. 첫째로 통일 전선 사업에서 지하당의 영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독자성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둘째로,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노동계급의 순결성을 보장하는 것...셋째로, 당의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옹계 결합하고 좌·우경적 편향을 철저히 극복하는 원칙이다...넷째로, 전술적 동맹 대상의 이중성을 고려하여 믿으면서 경계하고 투쟁하면서 단결하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⁵⁾ 이라고 주장하였다.

오일환은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으로서의 남조선혁명전략 분석 : 통일전선이론을 중심으로”에서 “통일전선은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연합·동맹전략전술”⁶⁾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통일전선 구축과 관련하여 북한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남한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취약점이라고 밝히면서 진정한 민주화와 합리적인 부의 재분배를 바탕으로 사회적 정의가 실현될 때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⁷⁾으로 예상하였다.

강성윤은 “북한의 통일전선과 남한혁명론”을 통해 북한이 “대남혁명에 있어서 통일전선의 전개는 현 한반도의 공산화란 정권목표를 수정하지 않는 한 계속 존속될 것이며 따라서 통일전선체를 통한 정권의 보장과 통일방안 및 제의에서 통일전선전술을 활용”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열은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분석”에서 “북한은 통일전선을 보조역량의 편성문제로 성격지우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보조역량의 강화를 통해 주력군을 보호하려는데 있다”⁹⁾고 주장하였다.

5) 위의 책, 22-23면.

6) 오일환, “북한의 통일전략으로서의 남조선혁명전략 분석 : 통일전선이론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연구 1995년 3월호, 한양대학교 중소기업연구소, 1995, 215면.

7) 위의 책, 232면.

8) 강성윤, “북한의 통일전선과 남한혁명론”, 안보연구 1987년 12월호,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1987, 195면.

9) 유동열,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분석”, 공안연구 1998년 4월호, 공안문제연구소, 1998, 107

또한 “북한의 통일전선공작에 대항하여 반민족적인 김정일 독재 권력을 고립화시키고 붕괴시켜 나가기 위해 북한 주민을 자유와 민주화의 길로 이끌기 위한 역통일전선의 전개”¹⁰⁾를 강조하고 있다.

황호숙은 “통일전선과 민중조직”을 통해 “서구에서의 통일전선은 위로부터의 통일전선과 아래로부터의 통일전선이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그 적용을 달리해 왔으나 식민지 종속국에서의 반제민족통일전선은 정세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세계혁명에서 중심 동력으로 되어가고 있는 추세”¹¹⁾라고 기술하였다.

이상호는 “북괴의 통일전선전술에 대한 고찰”에서 통일전선전술의 개념을 “공산당의 힘이 약할 때, 그리고 혁명정세가 무르익지 않았을 때 취하는 퇴조기의 전술이며, 1921년 제3차 코민테른대회에서 채택된 전술”¹²⁾ 이라고 분석하였다.

박승춘은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략 연구”에서 북한 통일전선전략의 변천과정을 김일성시대와 김정일시대로 구분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이 “내부적인 환경 변화 요인을 종합 분석해 볼 때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외부사조의 유입 등으로 탈북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사회 통제력이 악화되어 체제 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이 대남 통일전선전략을 보다 서둘러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¹³⁾

면.

10) 위의 책, 120면.

11) 황호숙, “통일전선과 민중조직”, 대학문화 1988년 2월호, 서울시립대학교, 1988, 107면.

12) 이상호, “북괴의 통일전선전술에 대한 고찰”, 이데올로기 비판(1), 국제대학, 1982, 9-10면.

13) 박승춘,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략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 54면.

이성구는 “김정일 정권의 대남정책(1994-2005)”에서 북한의 대남정책 결정요인을 비교적 상세히 밝히고 대남정책 결정기구와 대남정책 전개 과정을 파악하였다.

특히 김정일은 남북한 정치문제를 “당국간의 협의를 통해 하지 않고 정당, 사회단체 등 대민족회의나 군중집회를 통해 해결하려는 상층부 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구사하고 있으며 지금도 사이비정당인 사회민주당 김영대 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유미영 위원장을 격상시켜 대남 창구로 활용하는 등 상층부통일전선전술을 그대로 지속시키고 있다¹⁴⁾”고 기술하고 있다.

김해호는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북한의 대남정책의 내용과 전략을 체계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1975년 이후 김정일이 대남사업을 직접 관장하면서 밝힌 대남혁명 및 통일관, 전략·전술에 입각하여 대남전략 전망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김정일의 통일노선과 관점은 김일성의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남공작의 주요한 전술·방침으로 남한 혁명운동에 대한 지도세력의 확보, 대중운동·통일운동에 대한 정치·조직적 지도강화, 사회혼란 조성을 위한 화전양면 전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북한은 “노동자·농민계급을 기본 동력으로 하여 한국내의 혁명의 참모부를 구축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민민전(구통일혁명당) 유형의 지하당 재건 공작을 계속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학생들을 혁명의 선도세력으로 하여 남조선혁명을 적극 추진하려는 공작을 병행하면서 최근 일부 지식인·종교인 가운데서 야기되고 있는 반미 경향과 반정부적 성향을 총 결집하여 국내외 통일전선 형성을 적극 시도해 나갈

14) 이성구, “김정일 정권의 대남정책 : 1994-2005”,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5, 290면.

것”¹⁵⁾으로 예측하였다.

양점석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 · 전술연구”에서 북한의 대남 전략 · 전술의 기초에 입각하여 김일성 정권과 김정일 정권의 대남 전략 · 전술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는 김일성 정권과 김정일 정권은 공히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위한 대남혁명 전략을 변함없이 지향해 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혁명역량 강화를 제기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취하고 있는 전술적 중심 고리는 남한 당국과의 상층통일전선전술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시켜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층통일전선전술을 통해 좌경친북세력을 선동하여 반미투쟁을 극대화할 것”¹⁶⁾ 이라고 밝혔다.

최세경은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략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전선 추진양상을 시기별로 나누어 상세히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는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략은 적어도 1990년대 탈냉전시대가 도래하기 이전까지 줄곧 남조선혁명을 통한 조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공세적 대남통일전선전략을 전개해 왔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은 사실상 흡수통일을 두려워하면서 방어적 수세적인 체제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전환되었으며 결국 남북한 간의 반세기 이상 지속되었던 체제 경쟁은 남한의 승리로 끝났고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목표로 한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은 실패했다고 평가하였다.”¹⁷⁾

15) 김해호,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5, 85면.

16) 양점석, “북한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 · 전술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2, 56면.

17) 최세경,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5, 204면.

전술한 바와 같이 통일전선전술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통일전선전술의 개념정의와 시대적 변천과정, 통일전선전술의 본질, 유래, 특징, 적용 유형, 향후 전개양상 등에서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은 시급히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통일전선전술의 개념 정의가 통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전략과 전술이 엄연하게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전선전술을 전략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통일전선전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통일전선전술의 개념 정의에 혼동을 빚고 있는 것이다.

둘째, 통일전선전술의 추진실태를 시기별, 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난 10여 년간 대남통일전선전술에 관한 연구가 부진하였다. 따라서 최근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술의 추진양상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저지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술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인식과 더불어 경찰의 대응방안 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북한은 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을 목표로 대남전략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통일전선전술을 추진하여 왔다. 그들은 7천만 우리 민족이 염원하는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외면한 채 통일과 혁명이라는 이중구조 속에서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더구나 일부 국민들 속에서는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대남통일전선전술의 저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한국과 북한의 공식 문헌을 연구 분석하는 『문헌 중심적 내용분석』(Textual Content Analysis)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하면서 동시에 『역사적 접근방법』(Historical Descriptive Approach)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자료로는 정부의 각종 간행물들과 북한 관련 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연구자료 및 학술회의 자료, 북한전문가들의 연구논문과 관계 문헌, 신문 및 인터넷 자료, 북한원전을 활용하였다.

북한의 문헌으로는 김일성저작선집, 정치사전,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설문·논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 당 대회 문헌집을 비롯하여 신문, 방송, 법령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김정일이 대남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1975년을 전후한 시기로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체계에 입각하여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 검토, 연구의 방법 및 범위를 기술하였다.

제2장 ‘통일전선전술의 특징과 적용유형’에서는 통일전선전술의 개념과 유래, 통일전선전술의 전개형식, 통일전선전술의 실천적 적용유형으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3장 ‘북한 통일전선전술의 본질’에서는 북한이 추구하는 통일전선전술의 목적과 특징, 통일전선전술의 형성원칙과 강화방안, 대남통일전선전술의 문제점 및 한계로 나누어 분석 검토하였다.

제4장 ‘대남 통일전선전술의 추진양상’에서는 북한의 통일전선기관을 대남통일전선기관과 대외통일전선기관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대남통일전선전술의 추진실태를 협상제외에 의한 대남통일전선전술, 연방제통일방안에 의한 대남통일전선전술, 지하당 구축에 의한 대남통일전선전술로 나누어 시기별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통일전선전술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의 전개양상을 예측하고 이를 저지해 나가기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 통일전선전술의 특징과 적용유형

제1절 통일전선전술의 개념

통일전선(United Front)이란 ‘공동전선’을 뜻한다. 통일전선전술은 원래 동맹(alliance)이란 용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¹⁸⁾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던 여러 정치세력들이 정치나 사회운동에 있어서 주요한 적대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공동목표를 향해 여러 당과 단체가 협동으로 행동의 통일을 이루는 일시적인 정치적 동맹의 형태를 말한다.

사전적 의미로는 “서로 다른 계급·계층·단체 등이 사상·종교·신조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결합하는 정치동맹의 형태”¹⁹⁾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공동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독자적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여러 정치세력들이 특정한 정치적 상황에 대처하여 적대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맺는 정치적 동맹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운동의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통일전선전술은 기존의 정치질서와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목적으로 혁명을 추진하는 신흥계급의 혁명과정에서 그 운동에 가담한 모든 계급을 총칭하는 의미로 민족전선, 민주

18) 동맹이란 개인·단체 및 국가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호 동일한 행동을 취할 것을 맹세하여 맺는 약속이나 언약을 뜻한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순수한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보다 훨씬 넓은 혁명운동을 추진하고 혁명 인도, 방향 설정, 지도에 포괄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전선의 성격에 따라 노동계급동맹, 반제국주의동맹, 반파시즘적동맹, 평화투쟁동맹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여 왔다.

19) 대세계백과사전 편집위원회, 대세계백과사전 1, 태극출판사, 1972, 571면.

전선, 인민전선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²⁰⁾

그러나 통일전선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적대적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여러 정당, 정치세력간 합당 및 연합은 외견상으로는 통일전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정치이념이나 정강정책이 계급투쟁을 통해 타도해야 할 적대적 대상과의 투쟁을 위한 연합이나 합당이 아니므로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통일전선과는 상이하다.

공산주의자들은 통일전선을 “일정한 혁명의 전략단계에서 노동계급의 영도 하에 혁명의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각 계급, 계층, 정당, 사회단체 개별인사들이 공동의 적과 투쟁하기 위해서 결성한 정치적 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일전선 및 통일전선전술은 공식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개념 정의가 통일적이지 못하다. 또한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며 각국의 특성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적용하여 왔다.

통일전선에 관해 레닌은 “너에게 세 개의 적이 있거든 먼저 그 중 둘과 동맹하여 하나를 타도하고, 나머지 둘 중 하나와 다시 동맹하여 다른 하나를 타도하고, 마지막 남은 하나는 1대 1로 대결하여 타도하라”²¹⁾고 주장하였다.

모택동은 “어떤 목적을 위해 특수단계에 있어서 서로 다른 단계상의 지위 그리고 서로 다른 정치상의 견해를 갖고 있는 인민과 정당의 연합, 즉 계급연합의 조직형태”를 통일전선으로 규정하였다.

북한의 정치용어사전에는 “통일전선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혁명의 전략단계에서 그 혁명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여러 정당·사회단체 및 개

20) 통일전선전술은 공산주의혁명이론에서 3단계 혁명론의 제1단계 전술이라 할 수 있다. 즉 계급을 초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주로 반제투쟁을 전개하여 독립을 쟁취하고 제2단계는 프롤레타리아계급 영도 하의 연립정권으로 대치하는 단계이며, 제3단계는 완전한 프롤레타리아독재로 옮기는 혁명을 말한다.

21) 남북문제연구소, 북한의 대남전략 해부, 남북문제연구소, 1994, 26면.

별적 인사들이 노동관계의 당의 지도 밑에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여 싸우며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은 정치적 연합”²²⁾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에서는 “통일전선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혁명의 전략단계에서 그 혁명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여러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인사들이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 밑에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여 싸우며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은 정치적 연합으로 규정하였다.”²³⁾

안보문제연구원에서는 “통일전선전술이란 공산주의자들이 반혁명세력의 타도를 목표로 하여 이른바 노동자, 농민은 물론 인텔리, 소자본가 등 비공산계통의 조직단체들과 긴밀히 연결시키는 조직공작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통일전선은 민족전선, 민주전선 또는 인민전선과 비슷한 의미로 쓰여 지고 있는데, 이것은 공산주의혁명이론에서 3단계 혁명론의 제1단계의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계급을 초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주로 반제투쟁을 전개하여 독립을 쟁취하고, 제2단계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영도하의 연립정권으로 대치하는 단계이며, 제3단계는 완전히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옮기는 혁명을 말한다”²⁴⁾고 정의하였다.

결국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은 대남혁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혁명역량을 획득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며, 정권탈취를 위한 혁명준비기의 구체적 전술이다. 최종적으로는 남한 내에서 폭력적 방법에 의하여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을 노동계급당, 즉 공산당의 영도아래 주력군을 편성하고, 이 주력군을 지원 옹호하기 위하여 사용한 모든 보조역량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이른바 그들

22)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용어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3, 615면.

23)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102면.

24) 안보문제연구원,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통일로 1989년 9월호, 안보문제연구원, 1989, 120면.

의 통일전선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통일전선이란 결국 혁명을 달성하여 정권을 쟁취할 때까지의 혁명준비기의 전술인 것이다.²⁵⁾

조태훈은 “통일전선이란 공산화혁명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이며, 공산주의자들이 반대세력의 타도를 목표로 노동자, 농민은 물론 지식인들과 소자본가를 포함하는 비공산계열의 조직·단체들과 연계를 맺는 조직공작이며, 혁명의 고조기와 쇠퇴기에 있어서 그 시기에 상응하는 책략에 의거하여 보조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자유역량을 강화하고 적대역량을 분산시키는 전술”²⁶⁾이라고 정의하였다.

박채용은 “통일전선은 약세에 있는 공산당이 강적을 타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모든 수단을 결정하는 전술로서 인민 또는 민족이란 용어를 수식하여 사용하고 있다. 흔히 통일전선은 계급을 초월하여 형성되고, 반제투쟁을 전개하여 독립을 쟁취하거나 반독재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여 정권을 탈취한다. 결국 통일전선전술은 공산주의자들이 대중을 자기편으로 끌어 들이기 위한 선동기술이고, 결정적인 혁명의 시기를 조성하기 위한 힘의 축적 기술이며, 퇴조기를 벗어나고 공산주의 혁명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일시적 타협 기술”²⁷⁾로 정의하고 있다.

중앙정보부에서 발행한 대남공작관계 용어집에는 “통일전선은 소수파의 입장에 놓여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자기편의 세력을 결집하고 상대방의 세력을 약화 또는 고립시키기 위해 이해관계를 서로가 같이 하는 계층 또는 정당·사회단체와 더불어 당면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기의 최고 강령(최종 목적)은 제쳐놓고 최저 강령의 일치점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협동하는 공산당의 전통적 전술 및 전략이다”²⁸⁾고 밝혔다.

전술한 바와 같이 통일전선전술은 추진 시기와 추진 국가, 연구자에

25) 위의 책, 128-129면.

26) 조태훈·이왕재, 공산주의 이론과 실제 비판, 창문각, 1982, 361면.

27) 박채용, 북한의 주체사상과 통일정책, 문우사, 1991, 287-288면.

28) 중앙정보부, 대남공작관계 용어집, 중앙정보부, 1979, 215-221면.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아직까지도 그 개념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통일전선전술은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혁명의 준비기에는 우익 정당·단체, 부농, 민족자본가, 종교인들과 손을 내밀어 동맹을 꾀하여 왔고 혁명 승리 이후에는 공산당의 권력기반이 안정되는 과거의 동맹세력들을 타도 대상으로 몰아 청산한 역사적 경험은 이미 오래전에 입증되었다.

더구나 공산주의자들은 통일전선전술을 민중권력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정치적 결합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이들이 통일전선전술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혁명 자체가 계급투쟁이며, 혁명의 주도세력인 노동계급이 혁명수행을 위해 여타 계층을 공산주의 주위에 묶어세우지 않고서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들 간의 평화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부르조아 간의 모든 이해 대립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형성의 전제조건은 우선 각 계급이나 정당파가 각자의 독자적인 요구를 유보하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서로가 결정한 최대공약수인 공동강령 아래 정치적으로 단결하고 협동하는 것이다.²⁹⁾

전술한 바와 같이 통일전선전술에 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통일전선전술의 개념을 정의한다면 “통일전선전술이란 공산주의자들이 소수의 공산당 역량으로는 혁명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조건에서 혁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계 세력들과 제휴하여 다수의 균중을 자기 주위에 결속시키기 위한 전술적 계략”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29) 백경남, “공산주의 통일전선과 그 실제”, 안보연구 제14호, 동국대학교안보연구소, 1984, 80-81면.

전략이 혁명운동에 있어 비교적 지속성이 있는 기본적 계약이라고 한다면 전술은 가변성이 있는 구체적인 행동수법이면서 전략에 종속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술도 공산주의자들이 추진해 온 모든 투쟁전술과 마찬가지로 조성된 혁명정세와 혁명의 발전단계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는 특징을 보여 왔다. 즉, 정권탈취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의 통일전선전술이 다르고, 반제·반봉건(반자본)인민민주주의혁명단계와 사회주의혁명단계, 사회주의혁명 이후 시기의 전술이 서로 다르며, 합법당과 비합법당의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전술이 서로 다르게 적용하였다.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술은 통일 또는 민족이라는 절대 명제를 내세우고 한국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여 각계각층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주요 타도대상을 고립시킨 후 부차적인 적에 대해 각계각층 세력과 잠정적으로 제휴하여 용공정권을 수립하고 동 정권과 북한정권과의 합작형식을 통해 적화통일을 이룩한 후 사회주의·공산주의 계속혁명 추진에 방해가 되는 부차적인 적을 제거해 버린다는 목적 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제2절 통일전선전술의 유래

통일전선에 관한 사상은 19세기 중엽 마르크스에 의해 최초로 제기되었으며 레닌과 스탈린에 의해 구체화되었고 소련의 10월 혁명과정에서 달성한 역사적 경험이 공산주의혁명에 보급되면서 일반화되기에 이르렀다.³⁰⁾

마르크스의 ‘다수자혁명론’과 레닌의 ‘노농동맹론’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등장한 시점에서 통일전선전술은 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공산주의의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그 이론이 정립되고 체계화되었으며 확대 발전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은 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따라서 대중 자신이 참가하지 않고서는 혁명에서 승리할 수 없다...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 관건은 누가 더 많은 군중을 쟁취하는가 하는 그 여하에 달려있다”³¹⁾고 주장하여 왔다.

마르크스는 1850년대 불란서혁명과 독일의 2월 혁명 실패 원인을 노동계급이 광범한 농민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한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혁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이 중심이 되어 농민과 도시 소자산계급을 비롯한 계급간 연합을 강화하고 주적을 타도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호소한 바 있다.

그는 ‘공산당선언’ 제4장 ‘각종 반정부 당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태도’를 통해 “독일에 있어서 공산당은 부르조아지가 혁명적으로 행동하는 한 그들과 손잡고 군주제, 봉건적 토지소유 및 반동적 소시민과 싸운다. 그러나 공산당은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간의 적대적 대립에 관한

30) 통일전선이란 용어는 1905년 러시아혁명과 더불어 등장하였고 실제의 적용은 1917년 10월혁명 당시부터이며 이론적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코민테른 제3차 대회 ‘전술에 관한 테제’가 채택되면서부터이다.

31)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164면.

명확한 인식을 노동자들에게 주는 일을 한시도 중지하지 않는다...공산주의자들은 모든 나라 민주주의 당 사이의 단결과 합의를 위하여 어디서나 노력해 나갈 것”³²⁾을 강조하였다.

엔겔스도 ‘블란서와 독일의 농민문제’에서 프롤레타리아 노동계급이 농민을 비롯한 계급간 연대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엘바강 동부의 농촌 프롤레타리아를 쟁취하는 것은 서부독일의 소농이나 심지어는 남부독일의 중농을 쟁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바로 여기에 엘바강 동부 프로시아에 우리의 결전마당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용케르층은 전력을 다하여 우리가 여기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우리는 어쨌든 그들을 쟁취하고야 말 것”³³⁾ 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통일전선체계를 완성시키지 못하였고 통일전선의 일반적인 윤곽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그 후 레닌과 스탈린에 의해서 통일전선전술의 이론적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1917년 10월 혁명과정에서 실천적인 경험을 갖게 되었다.

레닌은 마르크스의 계급동맹론을 계승하여 러시아 혁명시 노동자 계급을 주력군으로 하고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주로 빈농)을 견인, 동맹 대상으로 삼아 혁명을 성사시킨바 있다. 이른바 노농동맹론이 그것이다. 짜르(러시아 왕)라는 주적 타도를 위해 농민을 보조역량으로 견인하여 활용한 것이다. 레닌은 혁명성사후 공산주의 좌익소아병(1920)이란 책자를 통해 통일전선의 개념을 한층 발전시키는데, ‘정면 공격이 뜻대로 되지 않는 정세 하에서는 상대편의 내부의 대립과 같

32) 평양사회과학원,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이론 및 전술에 대하여 1, 조선노동당출판사, 1965, 46-48면.

33) 평양사회과학원,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이론 및 전술에 대하여 2, 조선노동당출판사, 1965, 482면.

등을 이용하고 동맹 가능한 부동층과도 타협하거나 협조하여야 한다. 비록 불확실하고 조건적 세력일지라도 타협하고나 협조하라'고 공산당 동맹전술을 밝혔다.³⁴⁾

또한 '노농동맹과 농민문제에 대하여'에서 "노동자들은 민주주의적 투쟁을 부르조아지의 일부, 특히 소부르조아지와 같이 전개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투쟁에 있어서 노동자들은 전체 부르조아지를 반대한다. 관리 및 지주와의 투쟁에 있어서는 전체 농민과 심지어는 부유한 농민 및 중농과 더불어 그것을 진행할 수 있으며 또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르조아지와 투쟁, 부농과의 투쟁에 있어서는 오로지 농촌프롤레타리아트와 동맹함으로써만 확실하게 이를 수행할 수 있다"³⁵⁾고 강조하였다.

스탈린은 "중간층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농민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1905년부터 1917년까지 혁명의 전 기간을 관통하였으며 아직도 종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간단히 말해서 10월 혁명은 세계의 모든 혁명들 중에서 처음으로 중간층에 대한 농민에 대한 문제를 전면에서 내세웠으며 이 문제를 승리적으로 해결하였다...10월 혁명의 첫 공적은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다"³⁶⁾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0월 혁명 당시 레닌과 스탈린은 통일전선전술을 노출시키지 않았고 통일전선전술이라는 용어 자체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레닌은 '공산주의 내부의 좌익소아병'을 통해 "정면공격시 뜻대로 되지 않는 정세 하에서는 상대방의 내부 대립과 갈등을 이용하고 동맹 가능한 부동층과도 타협하거나 협조하여야 한다...비록 불확실하고 조건적 세력일지라도 타협하거나 협조하라"³⁷⁾고 지시하였다.

34) 유동열,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분석", 공안연구 1998년 4월호, 공안문제연구소, 1998, 102면.

35) 위의 책, 285면.

36) 스탈린, 스탈린전집 상, 조선로동당출판사, 1949, 245-247면.

37) 김운영, 통일전선의 전략과 전술, 도서출판 아침, 1988, 12면.

통일전선전술의 개념이 공식화된 계기는 1921년 6월 코민테른 제3차 대회에서 ‘통일전선에 관한 테제’를 채택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³⁸⁾

당시 통일전선에 관한 테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유럽 각국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실패하였기 때문이다.³⁹⁾ 유럽 각국에서는 변혁운동의 고양기에서 퇴조기로 이행하는 시기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공세적 전술에서 포위전술’로 변화되었고 ‘공공연한 무장투쟁 대신에 침투로’ 라는 전술상의 변화로 공동행동, 연합의 통일전선전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코민테른은 좌익극단세력들을 공격하고 공산당과 대중과의 긴밀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 속으로’ 라는 슬로건⁴⁰⁾을 채택하게 된다.

1922년 11월 코민테른 제4차 대회에서 통일전선에 관한 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코민테른은 “세계프롤레타리아트의 통일전선을 위해 투쟁하라! 정당·정파 및 정치적 태도 여하에 관계없이 공동방위에 전 프롤레타리아트를 결집하고 통일하기 위하여 투쟁하자!”라는 노동자정부 슬로건을 제시하고 동년 12월 5일 ‘전술에 관한 테제’를 채택하여 통일전선전술이 공식화되었다.

통일전선전술은 1930년대 전반기에 들어서 전면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전술적 개념이 보다 확대 발전하였다.

당시 독일과 이태리, 일본 등 국제파시즘을 반대하는 민족해방운동이 세계 도처에서 전개되었으며, 공산주의자들은 민족해방운동을 민족·식

38) 제3차 대회에서는 좌익극단분자들을 공격하고 공산당과 대중과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하였다. 당시공산당 내부의 극좌모험주의는 대중적 지지기반을 저하시켰고 코민테른은 노동자대중을 결집하기 위해 통일전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39) 독일 내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좌절→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출범, 헝가리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자 연합의 실패 등을 들 수 있다.

40) 여기서 말하는 대중은 비공산계 노동조합성원들과 그 밖의 근로인테리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모든 성원들과 근로인텔리들을 공산당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조직공작을 통일전선전술이라고 불렀다.

민지혁명과 결부시켜 민족국가 단위로 반동적 부르조아 정당까지도 반파쇼의 기치 밑에 단결을 도모해 나가는 인민전선운동을 착안하게 되었다.

반제통일전선 반파쇼인민전선은 1935년 7월 25일 코민테른 제7차 대회에서 디미트로프에 의해서 정식화 되었다.

코민테른 집행위원장이었던 디미트로프는 ‘반파시즘 민주주의 옹호’라는 인민전선전술을 제시하고 사회주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농민과 도시 소자산계급, 지식인 등 비공산 세력들과 계급동맹을 결성하여 주적인 파쇼를 타도한 후 비공산세력을 제거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디미트로프는 “파시즘을 가장 반동적인 동시에 가장 배타적인 또 가장 제국주의적인 금융자본 제요소를 노골적인 테러적 독재로 규정하고 파시즘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부르조아세력)까지도 파시즘의 탄압대상이 되므로 이들과의 적절한 연대를 통하여 한편으로는 주체역량을 보호·확대 강화하고 적을 고립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파시즘에 승리할 수 있는 근거지를 확보해야 한다”⁴¹⁾고 주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통일전선전술은 각국의 정세 변화와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왔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의도는 히틀러의 직접적인 위협으로부터 소련을 보위하고 국제공산주의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영국과 불란서 등 제국주의 열강 체계를 약화시키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즉, 파시즘의 세력을 분쇄하기 위해 공산당과 비공산당을 막론하고 파시즘에 반대하는 자이면 누구나 인민전선으로 단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통일전선전술은 모택동이 전개한 2차에 걸친 국·공 합작 경험이 통일전선전술의 성공적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41) 황호숙, “통일전선과 민중조직”, 대학문화 1988년 2월호, 서울시립대학교, 1988, 106면.

모택동은 중국혁명과 중국 공산당 제하에서 “중국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자신은 극히 높은 조직성과 의식성을 지니는 계급이지만 자신의 계급역량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상황에서 모든 가능한 혁명적 계급과 계층을 결집하여 혁명의 통일전선을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 사회의 각 계급에 있는 농민은 노동자 계급의 굳건한 동맹군이고 도시 소부르조아 계급도 동맹군이다. 민족 부르조아 계급은 일정한 시기, 일정한 정도에서 동맹군이다. 이것도 현재 중국의 혁명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는 근본법칙의 하나인 것이다”⁴²⁾고 밝혔다.

전술한 바와 같이 통일전선전술은 서구에서 위로부터의 통일전선과 아래로부터의 통일전선을 시기와 장소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한데 비해 식민지 종속국가에서의 반제민족통일전선은 정세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구나 북한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 한국사회를 신식민지사회로 규정하고 민족문제(분단 극복과 평화통일의 문제)와 계급문제의 올바른 결합에 의한 반제·민족통일전선 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들은 전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민족적 억압에 반대하는 한국의 모든 애국역량을 총결집시켜 단결된 혁명역량으로 매국세력과 제국주의를 이 땅에서 몰아낼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김정일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남통일전선전술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 축적된 통일전선전술을 북한의 실정과 한반도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접목시킨 것에 불과하다.

42) 박편우 편, (모택동) “중국혁명과 중국 공산당”, 사회계급론, 백산서당, 1985 참조.

제3절 통일전선전술의 전개형식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소위 민중이 주인 되는 새 사회(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투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계급투쟁을 부각시키고 통일전선에 노동자계급을 끌어들이면서 노동자 대중의 다수 확보에 전념하는 한편 하층통일전선과 상층통일전선의 유기적인 결합을 추구하여 왔다.

1. 하층통일전선

통일전선은 공산당의 혁명역량을 부단히 강화하기 위한 전술이다. 때문에 혁명의 결정적 시기까지,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한 전술로 활용하고 있다.⁴³⁾

하층통일전선은 통일행동을 위한 각계각층 군중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다. 주력군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조건에서 하층통일을 기본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각계각층 군중을 쟁취하기 위해 주력군에 들어있지 않는 그들과의 연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코민테른은 제5차 대회에서는 “하층통일전선전술은 극히 회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어디서나 필요한 것”⁴⁴⁾ 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하층통일전선전술은 통일전선전술의 원형으로 어떠한 전술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특히 하층통일전선 형성에 우선적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혁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중적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통일전선 자체의 목적

43) 강인덕, “통일전선전술과 통일문제”, 통일문제연구, 국토통일원, 1990.12, 87-88면.

44) 강인덕, 공산주의와 통일전선, 극동문제연구소, 1980, 46면.

과 이를 강화함으로써만 상층통일전선을 구축하는 데 용이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논거에 따른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사회의 빈곤층과 낮은 계층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불평불만요인을 파고들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⁴⁵⁾

따라서 북한은 하층통일전선을 강화시켜 광범한 군중을 결속시키고 혁명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넓힘과 동시에 통일전선운동에 대한 당의 영도를 보장하고 혁명투쟁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것은 하층통일전선을 강화함으로써 반동적 상층부를 고립과 동요에 빠지게 하고 반면에 통일전선체의 공고한 기반을 조성하여 상층통일전선의 실현을 촉진시킨다는 입장이다.

혁명의 퇴조기 전술로써 공산당 활동이 국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시기에 이를 타개하고 공산당 세력의 보존 및 축적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아래로부터의 통일전선전술을 제시하였다.⁴⁶⁾

그러나 공산주의의 역사상 노동 대중에 의해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한 예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계급은 혁명의식을 스스로 갖고 있지 못하며 공산주의 이론이 실제와는 거리가 먼 이상이고 환상에 불가하기 때문이다.

2. 상층통일전선

상층통일전선이란 주로 정계의 진보적 인사들이나 중간층의 정당, 사회단체의 지도성원들과의 연합을 의미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상층통일전선의 실현이 하층통일전선의 강화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준다고 강조

45) 김창순, 북한총람, 북한연구소, 1983, 1623면.

46) 이탈리아 공산당이 파시스트 정부수립으로 지하조직화(1923), 불가리아 공산주의자들의 봉기 실패(1923.9), 독일 노동자투쟁의 실패(1923.10), 발칸제국의 공산당 불법화 등을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하여 왔다.

그것은 각 당과 각 단체들은 하나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상층은 하층군 중을 자기의 조직적 통제 밑에서 끊임없이 정치적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고 반면에 하층은 상층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1920년대 중반 상당수가 공산당에서 이탈하게 되자 코민테른은 제5차 대회에서 사회민주주의자들과의 정면대립 보다는 타협을 추진하여 왔다.

상층통일전선전술은 구주에서 공산주의운동이 일대 타격을 받게 되었고 반과쇼투쟁에 각 정당들이 공동보조로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서 취해진 전술로⁴⁷⁾ 시기와 상황 변화에 따라 그 역점방향을 달리하여 추진하여 왔다.

공산주의자들은 상층통일전선의 실현을 통해 혁명적 당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내부의 동요성을 극복하면서 반제적이고 애국적인 입장의 견지, 하층통일전선 강화, 광범한 보조역량을 포괄한 위력 있는 혁명역량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당시 유럽에서의 급진적 혁명을 기도한 코민테른은 이에 동조하지 않는 제2, 제3반인터내셔널 등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회민주당 지도자들과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협조주의자, 부르조아의 압잡이, 노동자 대중에 대한 배신자로 규정하였고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의 과격한 폭력위주의 투쟁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조직·사상적 역량을 강화하여 그들의 분열책동을 억제시키는 투쟁을 전개하였다.⁴⁸⁾

사회민주당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Versailles조약 이후 유럽제국이 점차 상대적 안정기에 들어섰고 이에 따라 급진적 변혁보다는

47) 민병천, 북한공산주의, 대왕사, 1983, 476면.

48) 영국에서 제2인터내셔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당의 선거에 의한 정권 장악, 프랑스의 좌파연합 승리, 독일에서 Dawes안의 선진과 관련하여 사회주의적 평화주의가 확대되면서 사회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강화되었다.

사회 안정과 국제경제 재건을 위한 노동자 자신의 의지와 요구가 불세비
키적 급진파의 선동을 물리쳤기 때문이다.

1935년 7월 코민테른 제7차 대회에서는 ‘반파쇼통일전선’을 채택하고
‘사회주의 제정당보다 몇 십 배나 강한 적, 파시스트 반대’에 모든 투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제4절 통일전선전술의 실천적 적용유형

통일전선전술의 실천적 유형은 그 목적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통일전선전술과 반파쇼 통일전선전술, 반제국주의민족해방 통일전선전술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① 프롤레타리아 통일전선전술은 자본가 계급에 대한 계급투쟁을 목적으로 제시된 전술이다.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 다양한 조건과 처지의 노동자 계급과의 결합을 추진하여 왔다.

② 반파쇼 통일전선전술은 세계 대공황으로 인한 파시즘의 대두에 대항하기 위해 제시된 전술이다. 유럽의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부르조아 민주주의 세력과 연대하여 반파쇼 통일전선을 형성하였다.

당시 코민테른은 파시즘의 본질을 제국주의적 독점대자본의 노골적인 테러적 독재로 규정하고 부르조아 지배형태의 질적인 변화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파시즘을 일반 부르조아와 구별하여 주적으로 규정하고 파시즘을 타도하기 위한 광범위한 통일전선전술을 전개하였다.

③ 반제국주의민족해방 통일전선전술은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피압박 국가나 민족에서 민족해방을 목표로 각계각층의 노동자, 정당, 사회단체 등이 연합하는 통일전선을 의미한다.

당시 레닌은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에 신음하고 있는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위해 먼저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식민지 피압박 민족은 민족해방을 위해 부르조아지나 소부르조아지와 통일전선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반제국주의민족해방 통일전선전술은 코민테른 제2차 대회부터 시작되었으며 시종일관하게 계급 및 계급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계급 대 계급 정책을 철저하게 지키는 통일전선전술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레닌의 사망(1924) 후 소련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분열과 대립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각 국가의 다양한 노동조합운동과도 충돌하여 공산당이 고립되는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다.

그 후 통일전선전술의 실천적 투쟁은 제2차 대전을 계기로 더욱 새롭게 변화 발전하여 왔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만 하여도 혁명형태가 노동자·농민 동맹에 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후 시기부터는 노농동맹을 기초로 한 광범위한 계급·계층을 자기의 동맹세력으로 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서유럽에서의 반파쇼인민전선과 중국의 반제민족통일전선,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등이 전형적인 통일전선의 모델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국가의 통일전선운동의 경험은 각 나라의 구체적 상황과 특성에 따라 심화 발전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1. 서유럽에서의 반파쇼인민전선

반파쇼인민전선은 1930년대 범서구적으로 전개된 통일전선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공산당을 들 수 있다. 코민테른 제7차 대회에서 결정된 상부통일전선에 역점을 두고 파시즘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형성된 통일전선전술이다.

반파쇼인민전선의 목적은 히틀러의 직접적인 위협으로부터 소련을 보호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파쇼독일에 대한 영국, 불란서 등 자본주의 열강들의 적개심을 자극함으로써 제국주의 지배체제

를 약화시키려는 데 있었다.

반파쇼인민전선은 각국의 특성에 맞게 ‘민족해방전선’, ‘인민연합전선’, ‘구국전선’ 등의 형태로 통일전선운동이 전개되어 왔다.

프랑스의 반파쇼인민전선은 1934년 7월 사회당과 반파시즘공동행동협정을 체결하고 1936년 5월 3일 총선거⁴⁹⁾를 통해서 인민전선정부를 수립하였다.⁵⁰⁾

프랑스의 반파쇼인민전선은 통일전선정부 수립이 이론 및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경험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당시 인민전선 규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① 인민전선은 정당도 초정당도 아니며 반파쇼 제 단체의 연대인 것이다.
- ② 참가단체의 지방조직은 각기의 지방 규모로서 인민전선을 조직한다.
- ③ 인민전선은 개인의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④ 재정은 참가단체의 자발적 헌금에 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프랑스 공산당이 사회당과의 통일전선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내적으로 사회당이 반파시즘통일전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현될 수 있었다.

스페인의 반파쇼인민전선은 1936년 1월 사회당 좌파 · 공산당 · 좌익 공화파와 노동조합 사이에 인민전선협정을 체결하였다.

동년 2월 16일 총선에서는 기존 지배층을 타도하고 481 의석 중 253석을 얻어 인민전선파가 승리를 거두었다. 총선에서 승리한 인민전선파는 좌익공화파의 ‘아자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인민전선정부를 수립

49) 인민전선파가 373석(사회당 146석, 급진사회당 116석, 공산당 72석, 기타 39석)를 얻어 반대파 248석에 비해 크게 대승하였다.

50) 총 98개 단체가 참가한 반파쇼인민전선은 공산당 · 사회당 · 급진사회당 · 사회주의정당 그룹 · 노동총동맹, 통일노동총동맹, 암스테르담 · 프레이엘 운동이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하였다.⁵¹⁾

당시 인민전선운동은 사회당 좌파 계열의 ‘라르고·카발리에프’가 중심이 되어 노동자 계급의 계급의식을 함양시키고 노동자와 정당 들 간의 결속을 지속적으로 추진⁵²⁾하여 왔지만 결국은 프랑코 파시스트군에 의해 3년 만에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중국의 반제민족통일전선

반제민족통일전선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과정에서 전개된 통일전선전술이다. 인민민주주의 혁명에 있어 통일전선전술은 서구에서 위로부터의 통일전선과 아래로부터의 통일전선이 시기와 장소에 따라 적용을 달리 한데 비해서 식민지 종속국에서의 반제민족통일전선은 정세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전개 되면서 세계혁명의 중심동력이 되어 왔다.

중국에서의 반제국주의통일전선전술은 서방제국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 통일전선전술과는 명확히 구분된다.⁵³⁾

모택동은 “중국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자신은 극히 높은 조직성과 의식성을 지니는 계급이지만 자신이 계급역량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상황에서 모든 가능한 혁명적 계급과 계층을 결집하여 혁명의 통일전선을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 사회의 각 계급에 있어 농민은 노동자계급의 굳건한 동맹군이고 도시 소부르조아 계급도 동맹군이다.

51) William Z. Foster, History of the three Internationals, New York : International Publishers, 1955, pp.446-447.

52) 총선 이후 공산당은 좌파 공화당 내각에 두 명의 관료로 입각시키면서 인민연합정부를 구성하였다.

53) Jane Degras, The Communist International 1919-1943(London:Oxford Univ. Press, 1956), p. 416.

민족 부르조아 계급은 일정한 시기, 일정한 정도에서 동맹군이다. 이것도 현재 중국의 혁명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는 근본법칙의 하나인 것이다”⁵⁴⁾라고 밝혔다.

중국공산당은 1921년 7월 상해에서 제1차 전국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정식 발족하였다. 그리고 제2차 대표자대회(1922년 7월)를 통해 국민당과의 연합전선 형성을 결정하고 봉건과 군벌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 연합으로 제1차 국공합작(1922-1927)을 추진하였다.

당시 국민당에 가입한 공산당원은 123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5년 후(1927년) 공산당원의 수는 57,000여명에 달하였다.⁵⁵⁾

제1차 국공합작이 결렬(1927년 7월 28일)되자 중국공산당은 무장투쟁에 의한 국민당 타도를 제시하였다. 그 후 중국공산당은 무장봉기와 토지혁명을 추진하여 추수폭동 및 코민테른의 지시에 따라 소비에트 정권을 조직하였으나 모두 실패하게 되었다.

결국 중국 공산당은 소극적 활동에 접어들게 되었고 국민당은 5차에 걸쳐 공산당 토벌을 단행하였다. 이시기 중국 공산당은 2만 5천리 대장정을 강행하면서 혁명역량을 축적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1935년 12월 27일 모택동은 내전 중지 및 항일무장투쟁의 원칙에 대한 항일민족통일전선을 발표하였다. 1937년 9월 22일에는 국난 극복을 위한 선언을 통해 국민정부가 요구하는 4개항 조건⁵⁶⁾을 수락하고 이 기간 내전 중지, 항일 일치를 명분으로 한 제2차 국공합작(1937-1944)을

54) 모택동, 중국혁명과 중국 공산당, 박현우 편, 사회계급론, 백산서당, 1985, 황호숙, “통일전선과 민중조직”, 대학문화 11호, 1988년 2월호, 서울시립대학교, 1988, 104-111면. 재인용.

55) 공산당원들을 국민당에 가입시킨 이유는 ① 수세기에 놓여 있던 공산당의 신분을 보장받고, ② 중앙 당 보다는 지방 당에 깊이 파고들어 동조자의 규합 및 조직화 도모, ③ 공산당을 소생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를 조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56) ① 손문의 삼민주의 실현, ② 일체의 폭력·전복 행위 중지, ③ 소비에트정부 취소, ④ 경관을 국민혁명군에 개편하고 국민정부 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항일 연합을 담당한다.

추진하였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8로군에게 중일전쟁은 중국공산당 발전의 절호의 기회이다. 이에 우리가 결정할 정책은 7분 발전, 2분 응수, 1분 항일이며, 이 정책은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즉, 첫째 단계는 국민당과 타협, 합작하여 소생발전하고, 둘째 단계는 국민당과 대등한 역량을 얻어 실력으로 대결하며, 셋째 단계는 화중각지 깊숙이 들어가 유격근거지를 세우고 국민당을 반대 한다는 방침을 하달하였다.⁵⁷⁾

중일전쟁 과정에서 항일민족통일전선을 성공적으로 결성한 중국공산당은 1945 8월 15일 일본군은 패망 이후 외각에 머물러 있던 국민정부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중공군 총사령관 주덕으로 하여금 모든 도시에서 일본군의 무장 해제하고 중국 각 지역을 사실상 장악하였다.

그 후 중국공산당은 1946년 5월부터 1947년 10월 지주 및 부농 등의 토지를 몰수하여 빈농에게 분배함으로써 노동자, 농민의 지지를 끌어내었고 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⁵⁸⁾

3.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1960년 9월 베트남 노동당 제3차 대회의 결정에 따라 1960년 12월 20일 조직되어 정치투쟁과 무장투쟁을 동시에 전개하였다.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위로는 중앙위원회로부터 아래는 촌락의 행정해방조직에 이르기까지 계층별 행정기구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1963년 12월 19일 하노이 방송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에 30개의

57)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정책연구 제43호, 국제문제조사연구소, 40면.

58) Mao Tse-tung, "Problems of war and strategy" inselected works,(New York : International Publishers, 1954), II, p.267.

조직과 70만 명의 조직구성원이 활동하고 있다"59)고 발표한 바 있다.

1969년 6월 8일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해체하지 않고 1972년 말까지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다.60)

그 후 미국이 베트공과 공산월맹의 존재를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미군이 철수하게 되자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은 1973년부터 티우 정부군을 상대로 본격적인 투쟁을 개시하여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을 점령, 정권을 탈취하여 남베트남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였다.61)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후진국에서 달성한 공산주의운동의 또 하나의 경험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북베트남의 군사역량과 남베트남의 정치역량을 밀접하게 결부하여 정치투쟁과 군사투쟁을 병행하였다는 점에서 쿠바의 무장투쟁 중심의 혁명전선(무장투쟁 중심의 7월 26일 운동)과 정치투쟁 중심의 통일전선전술을 전개한 칠레공산주의운동과도 엄격히 구별된다.

59) 강인덕, 공산주의의 통일전선에 관한 연구, 1977년 3월, 75면.

60) 김남식, "통일전선 전술과 대남전략", 안보연구, 동국대학교안보연구소, 1982. 12, 26면.

61) 김재일,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4, 39-40면.

제3장 북한 통일전선전술의 본질

제1절 통일전선전술의 목적

대남통일전선전술의 목적은 혁명의 주력군을 육성시킴과 동시에 주력군을 보조할 수 있는 부대를 강화시키는데 있다.

북한은 광범위한 군중을 통일전선에 묶어세울 때 반혁명 세력을 고립시킬 수 있으며 혁명역량을 보호하고 확대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특히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고 이 주력군을 지원, 엄호할 보조역량을 통해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왔다.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미국의 개입을 배제하고 한국내 친북 세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한국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 이완을 피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은 이른바 대남혁명의 가장 큰 장애물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현 정부를 타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주력군 뿐만 아니라 보조역량까지도 혁명역량으로 이용하겠다는 속셈이다.

더구나 주력군을 보조하는 이른바 혁명역량은 각계각층의 군중을 통일전선에 결집시켜야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 왔다.

그것은 각계각층 군중은 개별적인 자연군중으로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으나, 주력군과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기본계급인 노동자와 농민의 힘을 합쳐 이들을 조직화 할 때 혁명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보조역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층을 진보적 청년 학생들과 지식인, 애국적 민족자본가 및 도시소자산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은 진취성이 강하고 혁명성 및 반제의식이 높으며 남한사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계층은 중간계급으로서 혁명의 주력군은 될 수 없지만 노동자, 농민과 혁명운동 사이에 교량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혁명투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2절 통일전선전술의 특징

통일전선전술은 다음과 같은 특징⁶²⁾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일정한 시간(혁명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공산주의세력을 무찌르기 위해 다른 정치세력과 일시적 연합을 결성한다. 다시 말하여 주적을 타도하기 위해 부차적인 적(반공세력이든 친공세력이든 관계없이)과 동맹을 맺고 주적을 고립화시키고 해당 혁명의시기 투쟁과업이 완성되면 그 동맹을 즉각적으로 파괴해버린다.

둘째는 반드시 공산주의자가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⁶³⁾ 이를 위해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자유가 억제되는 어떠한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산당은 통일전선에 가입한 다른 정당의 요구와는 관계없이 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셋째는 상층통일전선전술보다 하층통일전선전술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이 원칙이 바로 연합해야 할 상대방 당이나 사회단체의 지도자들과의 연합보다 그 당을 구성하고 있는 당원이나 단체원과의 연합, 즉 상대방 당의 당원들이 공산주의자의 선전과 선동을 받아들여 그들의 지도부에게 압력을 가하게 만드는 정치공작을 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연합한 정당과 사회단체를 내부로부터 붕괴 시키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넷째는 오늘의 운동에서 그 운동의 장래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정권탈취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운동을 집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보다 큰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호의 제시와 투쟁방법의 선택을 전술적으로 잘 다듬어야

62) 강인덕, “북괴의 대화전략과 통일전선전략”, 공군, 1980.7, 공군본부정훈감실, 1980, 14-15면.

63) 만약 공산주의자에게 주도권이 장악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공산주의자들이 제시하는 투쟁 구호가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동맹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다는 말이다.

또한 작은 규모의 투쟁, 일상적인 생활상 요구에서 발생하는 구호로부터 정치투쟁을 가속화시키는 구호로 발전하며, 낮은 단계의 공동투쟁에서 보다 높은 단계의 공동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는 오늘의 연합은 곧 새로운 투쟁의 시초라는 전체를 제시한다. 그것은 오늘 연합하기로 약정한 정당이나 사회단체들도 결국 투쟁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일면 타협, 일면 투쟁”을 당초부터 개시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통일전선운동의 견지에서 볼 때 한반도에 조성된 특수한 사정으로부터 북한의 대남통일전선 공작은 첫째, 처음부터 외세에 의한 강요된 분단국가 혁명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내세울 만한 축적된 경험이 없었다. 둘째,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전략단계에 처한 현실에서 이 운동이 복잡성을 띠었다. 셋째, 6.25 동란을 거치면서 공산당의 전횡과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남으로서 이 운동이 더욱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지 되었던 것이다.⁶⁴⁾

64) 최세경, 앞의 책, 23면.

제3절 통일전선전술의 형성원칙

북한은 통일전선을 확대 발전시키고 전국적 범위에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각이한 정치세력들과의 광범한 연합전선을 형성해 나갈 것을 강조하여 왔다.

각종형태의 공동투쟁을 조직·지도함에 있어 공산주의자들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전술⁶⁵⁾을 요약하여 기술한다면 다음과 같다.

① 공동투쟁을 조직할 때에는 먼저 투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치밀한 계획 밑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② 투쟁 계기를 잘 조성, 이용해야 한다. 투쟁계기는 정세발전의 주객관적 요인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될 수도 있으나 공산주의자들은 그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성해야 하며, 일단 계기가 포착된 다음에는 지체 없이 투쟁에 돌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③ 공동투쟁에는 언제나 지하당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선봉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④ 조성된 정세와 군중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투쟁 형태를 잘 선택해야 한다. 즉, 청원, 진정, 태업, 농성, 시위, 파업, 폭동 등의 투쟁형태 중에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형태를 취해야 한다.

⑤ 투쟁구호를 제 때에 잘 작성하여 제시해야 한다. 즉, 투쟁구호는 군중들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 제시해야 하며 투쟁이 점차 고조됨에 따라 투쟁구호도 즉시 즉시 차원 높은 구호로 교체·제시해야 한다.

또한 군중들의 투쟁 기세와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적 구호와 정치

65) 서울대공전술연구소, 북괴의 통일전선공작전술, 서울대공전술연구소, 1989, 60-61면.

적 구호, 민족적 구호와 계급적 구호, 전술적 구호와 전략적 구호를 잘 배합하여 제시해야 한다.

⑥ 공동투쟁은 낮은 형태의 경제투쟁으로부터 점차 높은 형태의 정치투쟁으로, 지역적인 공동투쟁에서 전국적인 공동투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⑦ 모든 공동투쟁에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을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고 모든 투쟁을 높은 형태의 정치투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⑧ 공동투쟁에서 승산 없는 무모한 모험은 피하되 뜻밖에 일어난 자연 발생적 균중투쟁에 대해서는 외면하지 말고 적극 불을 붙여 연대투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⑨ 일단 투쟁에 들어간 다음에는 절대로 후퇴하지 말고 완강하게 밀고 나가야 하며 투쟁이 끝나면 마지막 결속을 잘 지어야 한다.

⑩ 투쟁을 결속지은 다음에는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투쟁과정에서 노출된 간부들을 깊이 은폐시켜야 한다.

⑪ 피해를 입은 가족에 대한 수습과 동시에 즉시 구속자 석방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⑫ 투쟁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 근거하여 다음 투쟁을 계속 준비해야 한다.

제4절 통일전선전술의 강화방안

북한은 당 규약 전문에 “조선로동당은 로동계급의 영도적 역할을 높임으로써 로동동맹을 기초로 한 전조선의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한다”⁶⁶⁾ 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은 “통일전선을 잘해야 할 필요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업을 잘하면 첫째로, 혁명의 주력군을 키우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광범한 군중을 통일전선에 묶어 세워야만 반혁명세력을 더욱 고립시키고 혁명의 주력군에 대한 적의 공격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혁명역량을 끊임없이 확대강화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혁명의 주력군을 보조할 수 있는 힘 있는 부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구리는 한편 각계각층 군중을 혁명의 편으로 끌어들이도록 통일전선사업을 잘해야 한다”⁶⁷⁾고 주장하여 왔다.

통일전선의 형성과 통일전선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해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원칙은 크게 두 가지 원칙이다.

첫째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의 투쟁 강령을 제시하는 것이다.

반미구국통일전선의 투쟁 강령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반미구국통일전선의 투쟁 강령은 통일전선운동의 기본방향, 기본목적을 명시하며 남조선의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통일전선체에 묶어세우는 기치이며, 노동계급의 당은 정확한 투쟁 강령을 추겨들지 않고서는 각계각층 군중을 통일전선에 망라시킬 수 없으며 조직화된 공동행동을 실현할 수 없다”⁶⁸⁾는 이유 때문이다.

더구나 이 책임을 “혁명의 참모부라고 할 수 있는 남한 내의 혁명적

66)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북한연구소, 1999, 1141면.

67)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92면.

68)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105면.

당, 즉 통혁당이 맡아야 한다”⁶⁹⁾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반미구국통일전선 강령의 목표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 강점을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⁷⁰⁾을 전개해 나간다는데 있다. 따라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쇼통치를 반대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용감하게 투쟁해 나갈 것”⁷¹⁾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일성은 “오늘날 남조선에서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하는 반미통일전선을 이룩하는 것은 혁명세력의 가장 중요한 요구입니다. 남조선의 노동자, 농민, 도시소부르주아지, 청년학생, 지식인, 그리고 민족자본가까지도 조국의 분열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에 의해 다같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같은 민족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습니다...반미 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노동계급의 영도 밑에 노동자, 농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동자, 농민의 동맹은 통일전선의 정치적·사회적 기초로 되어야 할 것”⁷²⁾을 강조하였다.

특히 한국 내의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실천방법으로써 반미구국통일전선의 강령은 미국식민통치의 청산과 남한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 그리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투쟁 강령의 알맹이로 해야 하며, 한국의 모든 피압박, 피착취 계급과 계층은 이 두 투쟁 강령과 절실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이익을 반영한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갈 때 광범한 군중을 통일전선에 묶어세울 수 있고 원수를 최대한 고립시켜 나갈 수 있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69) 한용원, 공산주의와 급진주의, 박영사, 1986, 211면.

70)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150면.

71) 김일성, 신년사, 1975.

72)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2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150-151면.

둘째는 반미구국통일전선운동에서 계급정책을 철저히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통일전선운동에서 계급정책은 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책이다. 그것은 노동계급과 그 당이 통일전선에 망라된 각 계급, 계층들에 대한 근본입장과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계급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 당은 “통일전선사업에서 자기의 독자성을 절대로 잃지 말고 항상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추미주의적 경향을 단호히 배격해 나갈 것”⁷³⁾과 노동계급의 영도 밑에 노농동맹 강화, 통일전선내의 각계각층 모든 역량과의 단결을 요구하고 있다.

통일전선에서 당의 독자성을 고수하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것은 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의 계급적 입장을 지키며 이 운동을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데로 영도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당의 영도가 보장 되어야만 노동계급을 복종시킬 수 있고 사회정치세력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반미구국 공동강령 실현에 조직 동원할 수 있으며, 온갖 기회주의적 요소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통일전선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발전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⁷⁴⁾

① 하층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상층통일전선과의 유기적인 결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하층 통일전선에 기본을 두는 것은 주력군에 포함되지 않은 각계각층의 균형을 통일전선에 결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층통일전선이 강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상층통일전선이 이루

73)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1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67, 92면.

74) 안보문제연구원,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통일로, 안보문제연구원, 1989. 9, 127-128면.

어진다면 그들 정당, 사회단체에서 상층의 동요성에 대한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하층통일전선이 강화되면 각 조직의 지도층은 자연적으로 고립되기 마련이며 이것이 튼튼하지 못한 채 상층통일전선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내부에는 범민련 남측본부와 범청학련 남측본부 등과 같은 하층통일전선체가 오래전에 구축되어 있다.

북한이 하층통일전선 강화에 기본을 두면서 이에 기초한 상층통일전선을 이룩하겠다는 것은 계급적 원칙까지 저버리고 혁명의 원수나 이색분자까지도 끌어들이어 통일전선을 중간층의 정치세력화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반혁명의 농락물과 전략시키는 우경적 편향과 노동계급의 근본이익을 고수한다는 구실 밑에 중간계층이나 그 영향 밑에 있는 광범한 군중을 배척함으로써 혁명대오를 좁은 울타리 속에 엮매놓고 고립상태에 빠뜨리게 하는 좌경적 편향을 미리 극복하고 혁명역량을 확대 강화시키려는데 그 저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을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중투쟁은 낮은 형태로부터 점차 높은 형태를 지향하면서 발전하게 된다. 북한은 통일전선을 형성 강화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낮은 단계의 공동투쟁을 점차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 발전시키며 부분적인 연합을 전면적인 연합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⁷⁵⁾ 을 강조하여 왔다.

그것은 통일전선에 망라되어 있는 대중은 서로 각이한 처지에 있는 계급과 계층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수준과 정치적 이념, 이해관계가 동

75)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395면.

일하지 않다.

따라서 실정에 맞게 처음에는 모든 군중이 다 접수할 수 있는 절실한 문제를 공동의 요구로 내세우고 공동투쟁을 전개하면서 점차 높은 것을 지향하고 조직형태도 높은 것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낮은 단계의 공동투쟁을 점차 높은 단계의 공동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성된 정세와 적아간의 역량관계 및 대중의 준비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대중의 정치적 각성이 높아지고 혁명역량이 강화되면 적아의 역량관계를 급변시키고 혁명정세를 주동적으로 성숙시킬 수 있으므로 더욱 높은 공동투쟁을 확신성 있게 벌려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일전선의 공동강령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③ 부분적인 연합을 전면적인 연합으로 전개시켜 나가야 한다.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을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은 부분적 연합을 전면적인 연합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개된다. 다시 말하여 "부분적인 연합으로부터 전면적인 연합으로의 발전이란 투쟁 강령의 깊이, 포섭한 혁명역량의 폭, 지역적 범위의 넓이 등에서 부분으로부터 전면으로의 조직형태의 발전을 의미한다.⁷⁶⁾

북한은 한국사회에서 반정부, 반파쇼민주화를 위한 공동투쟁을 벌이면서 궁극적으로는 반미구국, 조국통일로 그 투쟁 형태를 발전시키고 이에 상응하게 연합의 규모도 부분적인 연합으로부터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연합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④ 중간층 및 민족자본가와 단결하여 투쟁해 나가야 한다.

김일성은 “우리가 민족통일전선을 부르짖고 있는 때에 그들의 죄행을

76) 허중호, 앞의 책, 118면.

폭로하며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통일전선 내에서 그들과 단결하는 동시에 투쟁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근로대중의 정치적 각성을 높을 수 있으며 민족 자본가들의 동요성을 극복할 수 있다”⁷⁷⁾고 강조하였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한국의 민족 자본가를 비롯한 중간층들은 그 계급적 본성으로 말미암아 항상 투쟁과 타협, 혁명과 반혁명사이에서 동요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정권을 자기 손에 쥐려고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양면성 및 동요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영활한 전술을 적용해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간세력의 반제 애국적이고 반매관적 경향의 혁명적 측면을 적극 조장하면서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동요성과 타협성 등 부정적 측면을 예리하게 경계하고 그들의 죄행을 폭로 비판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전선 강화방침은 ① 주력군에 들어가지 않는 각계각층의 하층 군중을 끌어 모아 하층통일전선을 강화시켜 이를 토대로 상층부에 접근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② 통일전선에 망라될 일반 대중은 각각 입장이 상이하고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든 대중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절실한 공동의 요구를 제기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대중의 정치적 각성이 높아지고 혁명역량이 강화되면 적아의 역량관계를 변화시키고 정세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③ 투쟁 강령의 심도와 포섭 획득된 혁명역량의 폭, 그리고 지역 범위 등에서 부분으로부터 전면적인 조직형태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④ 중간층과 민족자본가는 투쟁과 타협, 혁명과 반혁명 사이에서 동요할 우려가 있는 계층이므로 초기 혁명단계에서 끌어들이 혁명보조세력으로 이용하고 그 혁명이 달성되면 다시 이

77)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6면.

들을 타도하여 자체 세력으로 흡수해야 한다⁷⁸⁾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대남통일전선전술을 강화시키고 있는 이유는 남북한 경력 격차, 외부사조 유입에 따른 사상이완 현상의 증가, 경제침체의 장기화와 식량부족, 국제적 후원세력의 약화, 한미의 대북강경정책 등으로 대내외적 불리한 상황을 인식하고 조기에 통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78) 김민하, 현대사회와 이데올로기, 대왕사, 1982, 261면.

제5절 통일전선전술의 문제점 및 한계

대남통일전선전술은 북한이 대남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혁명역량을 획득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 정권탈취를 위한 혁명준비기의 구체적 전술이다.

북한은 통일전선기구를 정권의 정통성을 뒷받침 하는데 이용하였고 통일방안의 제의 및 남북대화에 대남통일전선전술을 활용하여 왔다. 다시 말하여 민족해방을 위한 반미구국통일전선과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위한 반파쇼민주주의전선, 민족통일전선 등의 형태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반미구국통일전선은 남한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이라고 규정하는데서 그 중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문제로 파악하고, 한국사회에서 반미·민주화라는 투쟁 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 국민의 의식화 공작을 위한 선전선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반파쇼민주주의연합전선은 남한혁명을 성취하는 과도적 과정으로 제시된 단계적 투쟁방침이다. 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파쇼정권으로 규정하고 그 정권을 폭력적으로 정복하여 이른바 민주정권, 용공정권을 수립하면 남한의 혁명역량을 확대, 강화시키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며, 다음 단계에서 그와 같은 환경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혁명역량을 축적한다면 혁명에서 요구되는 기본모순을 해결하고 인민정권 수립⁷⁹⁾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족통일전선은 남과 북이 단일민족이며 민족분단의 상황에서 민족을 내세워 혁명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1973년 6월 23일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제시하면서 대민족회의 소집을 주장하였고, 1979년 1월 전민족대회의 소집을, 1981년 6월 민족통일촉

79) 강성운, “북한의 통일전선과 남한혁명론”, 안보연구, 동국대학교안보연구소, 1987. 12, 193면.

진대회 소집 등 민족이라는 용어를 시기와 장소에 따라 명칭만을 바꾸어 사용하여 왔다.

북한이 민족통일전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정당, 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 통일과 민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남한혁명을 위한 통일전선을 종합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남한 내에서 폭력적 방법에 의거하여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⁸⁰⁾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 농민을 노동계급당, 즉 공산당의 영도아래 주력군을 편성하고, 이 주력군을 지원 옹호하기 위하여 사용한 모든 보조역량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이른바 대남통일전선전술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대중 획득과 대중을 공산주의혁명 사상으로 개조하여 혁명역량의 획득, 비축하기 위한 전술이다.

② 혁명역량의 획득과정에서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정부통제력을 약화 시킴으로써 힘의 균형을 파괴하고 혁명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술책이다.

③ 일단 혁명여건이 조성되면 정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모든 투쟁을 전개하고 가능한 모든 세력의 힘을 이용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전술이다.

이상과 같은 근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술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⁸¹⁾

첫째는 정책우위의 전술이다. 북한은 남한혁명을 달성하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평화통일은 남한의 폭력혁명을 전제로 한 것으로 반드시 평화적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북

80) 제5차 당 대회 이후 제시한 인민민주주의혁명은 3단계 통일전선의 제1단계로서 남한 내의 계급적 및 민족적 모순을 이용하여 반정부요소들을 모아서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인민정권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81) 안보문제연구원 편, 앞의 논문, 129-130면.

한의 무력에 의한 한반도의 통일과 남한 자체의 혁명을 기대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북한은 대남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하여 남한 내에서 인위적인 혁명을 조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둘째는 힘의 이용전술이다. 남한혁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한 혁명여건 및 혁명역량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취약한 조건에서 북한은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가능한 모든 세력의 결집을 꾀하고 이용하려는 것이다.

셋째는 내부 이간전술이다. 그들은 한국 내부를 분열, 이간시키고 불신풍조를 조장하여 국민과 정부사이에 적대감을 고취하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왔다.

넷째는 내부 취약점 이용전술이다. 북한은 한국 내부에 깊숙이 파고들어 분열이라는 씨앗을 발아시켜 우리 내부의 틈을 더욱 확대시키고자 한다.

특히 정당 간, 국가와 국민 간, 한·미간을 이간시키고 부의 재분배, 부정부패,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한국사회의 민주화 등을 내세워 상대방 세력을 분열시키는 한편 일부를 이용하여 친북세력으로 끌어들이면서 한국 내부의 취약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온갖 술책을 꾀하고 있다.

다섯째는 임기응변전술이다. 이 전술은 기본적으로 상대방 세력 안에서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보유하면서 점차적으로 주위를 확대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적절하고도 신속한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틈만 있으면 남한 내부의 동조세력을 규합하고 한국 사회 내부를 부식시키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대남 교란작전을 구사하여 왔다.

대남통일전선 구축과 관련하여 북한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 내부의 취약점이다.

따라서 진정한 민주화와 합리적인 부의 재분배를 바탕으로 한 사회의 정의가 실현 될 때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합법화, 진보적인 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등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남한의 민주화 운동을 역이용하여 왔다.

그렇지만 동서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북한은 국제적인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과거 친북국가들과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국제적인 지위와 역할이 크게 증가하였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을 언제까지 고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 북한의 추진하고 있는 대남통일전선전술은 김정일 정권의 생존권적 차원에서 대내, 대남용으로 활용가치가 큰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다원주의의 성숙과 더불어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술은 점차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외면한 채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대남통일전선전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에게 우리 내부의 취약점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들에게 사전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4장 대남 통일전선전술의 추진양상

북한이 전개한 대표적인 통일전선공작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⁸²⁾

첫째,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각종 대남 제의나 방안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1993. 4. 7), 매 시기마다 제안하고 있는 남북정치협상회의(1977.1.25), 전민족대회(1979.1), 제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1983.1), 전민족통일협상회의(1991.1), 대민족회의(1995.1), ‘북·남·해외 정당단체연합회의’(1996.1) 등이 이에 포함된다.

둘째, 통일운동이라는 미명하에 개최하는 각종 행사이다. 1990년 이후 매년 8월 15일 개최하는 ‘범민족대회’,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비롯하여 매년 초 개최하는 ‘정당단체연합회의’,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민족대단결이란 미명하에 내세우는 각종 대남선동 공세이다. 예를 들면 ‘민족자주와 평화수호를 위한 남북해외 연대’를 통해 연방제통일방안의 합의 확산 및 교포들을 상대로 한 ‘친북·반한의식’ 주입 등이 이에 포함된다.

넷째, 통일전선부의 외곽조직인 조평통이나 조국전선, 범민련 및 반제민전 등을 내세워 각종 사안 발생시마다 발표하는 성명서, 격문, 대남편지 공세 등도 통일전선의 일환이다.

82) 유동열,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분석”, 공안연구, 1998년 4월호, 공안문제연구소, 1998. 118-119면.

다섯째, 종교 교류나 학술문화 교류를 내세워 중국, 독일 등 제3국에서 남북이 공동개최 하는 각종 행사 또는 각종 명분을 내세워 북한에 우리 사회의 종교계, 경제계, 학계 등의 지도층 인사를 직접 초청하는 행위도 궁극적으로는 통일전선공작의 일환이다.

여섯째, 미국의 신문 등 국제 언론 매체에 게재하는 대규모 광고 공세와 국제 지도층 인사들의 방북초청 공세도 국제통일전선 공작의 일환이다.

이외에도 북한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대남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제1절 북한의 통일전선기관

북한은 대남통일전선전술을 한반도 의 특성에 맞게 접목하여 폭넓은 개념으로 확대하여 활용하고 있다.

1949년 6월에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였다. 1960년 4.19 직후 ‘남북협상론’이 제기된 시점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1961)를 출범시켰다. 1980년대에는 반미구국통일전선, 반파쇼민주연합전선 등의 구축을 주장하면서 ‘한국민족민주주의전선’을, 1990년대 전민족적 통일전선전술 형성 차원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과 조국통일 범민족청년학생연합 등을 결성하여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통일전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다.

북한이 구사하고 있는 통일전선 구도는 대남, 대내, 대외로 구분할 수 있다.

대남통일전선은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한 정부차원의 합작과 교류, 정치협상과 반제민전을 주축으로 한 비합법 지하당통일전선, 그리고 조평통과 범민련을 매개로 한 합법적인 통일전선공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내통일전선은 혁명단계와 시기별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인민민주주의혁명단계(1945년-1958년 8월)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통일전선과 이후 사회주의혁명단계의 통일전선, 그리고 사회주의완전승리 이후 시기의 통일전선정책으로 구분된다.

대외통일전선은 대유엔외교를 비롯하여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공식외교(혁명외교)와 각종 국제기구 및 국제민주단체를 상대로 하는 공식, 비공식 외교공작(정당, 사회단체), 해외교포들을 상대로 하는 친북 반한단체 조직과 결성공작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대내통일전선기관은 생략하고 대남·대외통일전선기관을 구

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대남통일전선기관

북한의 대남정책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최고합동작전기관에 의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대남공작의 총 책임은 김양건 대남담당사업비서가 맡고 있으며 통일전선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민무력부에 정찰총국을 신설하여 대남·대외공작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전선부는 1977년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신설된 대남정책의 핵심 부서이며 통일전선공작을 주관하는 부서이다.⁸³⁾

부장 예하 제1부부장, 6개부(정책담당, 교류담당, 회담담당, 연고자담당, 총련담당, 조직담당), 직속기관으로 편성되어 있다.

정책담당부에는 부부장 예하 정책과, 대남과(한민전), 101 연락소, 26 연락소, 813 연락소, 310 연락소(개성, 해주), 한국민족민주전선중앙위, 친북조직담당과를 두고 있다.⁸⁴⁾

101 연락소는 1-5국, 조직과, 간부과, 기밀실, 기요실, 참사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임무는 대남심리전 신문, 대남심리전 문학, 대남심리전 빠라나 각종 인쇄물, 대남심리전 주제의 인터넷침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국은 신문, 2국은 빠라 및 각종 인쇄물, 3국은 인터넷, 4국은 음악 및 컴퓨터관리, 5국은 문학을 담당한다.

83) 유동열, 한국좌익학생운동의 이론과 실제, 민족정론사, 1995, 205면.

84) 장철현, 북한의 통일전선사업부 해부 ③, <http://blog.daum.net/blog/hdn/ArticleContentsView.do?blogid>, 2010. 03. 17.

특히 노동신문 5면은 101 연락소의 독점물로 되어 있으며 신문 외에도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TV총국, 민주조선 등 주요언론사에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제작물들을 배포한다.

26 연락소는 북극성전자악단, 창작조, 문학국, 방송국, 관리과, 기요실, 기밀실, 조직과, 간부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저한 은폐 하에 약 150명이 근무하고 있다.

813 연락소는 일명 강남출판사, 평양출판사, 목란출판사로 불리우고 있다. 통일전선부내 대남침투용 도서들과 전단지, 잡지, 신문, 위조 신분증을 비롯한 각종 서류들을 인쇄하는 출판소이다.

출판고, 교정과, 심의과, 해외판매과, 설비실, 자재실, 관리실, 간부과, 조직과, 도서실을 두고 있다. 약 1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조물들을 한국에서의 생산품들과 똑같이 모방하기 위해 일체의 자재를 조총련을 통해 조총련 산하 대동무역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조총련, 재중총련, 러시아고통련, 한민전 산하 동남아지역 지부들을 통해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지역으로 배포하고 있다.

310 연락소는 813 연락소에서 나온 각종 인쇄물이나 뼈라들을 기구를 통해 한국에 침투시키는 연락소로 개성과 해주에 분포되어 있다.

기구과, 대열과, 기상 및 설비연구과, 간부과, 조직과, 기요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류담당부에는 부부장 예하 교류 1과(대남교류), 교류 2과(종교과), 1-5국을 두고 있다.

교류 1과에서는 전교조, 민주노총, 범민련, 통일연대 등 남한단체 담당과가 존재한다.

2001년 한총련 담당과를 폐쇄하였으나 이는 과거처럼 대학생들을 이념화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배후 조직 관리에 힘을 집중하기 위한 것

으로 판단된다.

교류 2과는 주로 종교담당업무를 수행하며 ‘단군민족통일협의회’라는 위장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회담담당부에는 부부장 예하 회담 1과(협상), 회담 2과(전략), 조국평화통일서기국, 조국통일연구원, 조국평화통일촉진협의회를 두고 있다.

연고자담당부에는 부부장 예하 연고자과, 김일성연고실, 김정일연고실을 두고 있다.

총련담당부에는 부부장 예하 재일총련과, 재중총련과, 미주과, 56과, 56연락소를 두고 있다.

조직담당부에는 부부장 예하 간부과, 조직 1과, 기요실, 조직 2과, 초대소, 관리과, 의암초대소, 문수초대소, 순천초대소, 서산 등을 두고 있다.

현재 통일전선부는 직속기관과 외곽단체를 포함하여 약 3천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을 포함하면 약 3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요 임무는 남북회담, 해외교포 공작, 대남 심리전 및 통일전선 공작, 국내 좌익운동권의 지도 업무 등을 담당 수행한다.

통전부 산하 직할부서로 직접침투과, 남북회담과, 해외담당과, 조국통일연구원 등이 있다.

직접침투과는 간첩 우회침투공작을 전담하고 있으며, 남북회담과는 남북회담 및 교류업무를, 해외담당과는 5개과(조총련, 일본, 동남아, 미주, 구라과과)에 조총련 및 해외교포 및 포섭공작을 전담하고 있다.

조국통일연구원은 구남조선연구소를 개칭한 부서로서 대남 심리전 및 한국 관련 정보 및 자료 분석, 연구를 전담하고 있다.⁸⁵⁾

원장 예하 부원장과 종합정세연구실, 종합편집실, 인물자료, 사법 및 경찰, 군사정책, 언론·출판, 종교·노동·학생, 교통·체신, 해외교포 문제 등의 연구실을 두고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제반요소별 대남정책 자료를 작성하고 주요 인물 및 주변국 정세분석,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남조선문제연구를 격주로 발행한다.

또한 한국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연구원들을 정년퇴직이 아닌 평생직장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남한문제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시장 조사, 주가분석, 인플레이션 현황 등을 종합하여 향후 예측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경제동향을 주1회 김정일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제일 큰 한국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다.

외각 단체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반제민족민주전선」,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재북통일촉진협의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를 두고 있다.

또한 다당제를 위장하기 위해 만든 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과 기독교연맹, 불교도연맹, 천주교인렷회 등도 통일전선부의 지휘 통제를 받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961년 5월 13일 결성된 당의 외곽단체이다. 평화통일과 남북교류를 표방 제 정당 사회단체 각계 인사들이 망라되어 있다.

주요임무는 한국의 각계각층 인사 및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여 통일전선 형성, 적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고취하면서 남한 내 국론분열과 친북여론 조성을 위한 선전 공세 등 당의 통일정책을 대변하는

85) 1959년 12월 당 문화부 산하 남조선연구소로 신설되어 1978년 1월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으로 흡수되었다. 1990년 통일정책연구원, 그 후 남조선연구소를 거쳐 1992년 조국통일연구원으로 개칭되었다.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참사실, 서기국 등을 두고 있으며, 서기국 산하에는 조직, 선전, 회담, 조사연구, 총무부와 자료종합실을 두고 있다.

남북한 당사자간 이외의 접촉은 주로 조평통에서 맡고 있으며 1989년 2월에는 범민족대회 실무접촉을 제의한 바 있으며, 최근 들어 전민족적 대화를 촉구하는 대변인 담화, 남한정부의 핵문제선결정책 비난 성명 발표, 김일성 사후 남한 정부의 조문사절 불허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대남 원색적 비난을 계속하여 왔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⁸⁶⁾은 당의 전위기구이다. 대남비방을 위주로 하면서 대민족회의나 전민족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선전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1949년 6월 25일 남북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72개 정당·사회단체를 망라해 결성되었다. 현재 24개 정당 및 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한의 모든 반제역량을 결집시켜 적화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해 이바지 하고 있으며, 각종 성명 담화 발표, 남한측을 비난하거나 대민족회의, 전민족회의 소집 등을 요구하는 선전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장단과 상무위원회, 서기국을 두고 예하 조직부, 선전부, 국제부, 재정경리부, 기요실 등 5개부서를 두고 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직에 망라되어 있는 각종 단체로는 조선아시아 아프리카단결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친선단체, 조선기자동맹과 같은 직능단체, 김청동·농근맹과 같은 당의 전위조직, 조선기독교도연맹 등과

86)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노농동맹에 기초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역량의 결집을 표방한 정치조직체이다.

같은 종교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반제민족민주전선은 한국민족민주전선을 2005년 3월에 개칭한 것으로서 한국 내의 지하당인 것처럼 날조된 노동당 통일전선부 직속의 대남 혁명의 전위대로서 한국 내에서 주요사건이 발생할 때 투쟁구호를 비롯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한국사회에서 반정부투쟁을 선동하거나 민심교란을 선동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해외 동포들을 상대로 반한활동을 조장하여 왔다.

중앙위원회 산하 대변인과 6개국(선전, 청년학생, 노농, 종교, 상공인, 부녀국)과 흑색방송을 전담하는 칠보산연락소⁸⁷⁾, 해외대표부(일본, 쿠바, 마다가스카르)를 두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민간차원의 전민족적통일기구를 표방하면서 해외동포와의 연대를 통하여 해외에 활동기지를 두는 대남전략·정책기구로 부상되었다.⁸⁸⁾ 1990년대 한국의 반정부 재야인사 및 해외 반한인사, 친북세력들과 연계하여 결성한 친북반한 통일전선체이다.

북한은 “범민련의 결성은 북과 남, 해외의 통일 애국역량의 간고한 투쟁을 통해 이룩한 고귀한 성과이며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운동을 확대 발전시키는데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⁸⁹⁾고 호평한바 있으며 정부도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였다.

87) 대남흑색방송인 ‘구국의소리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88) 북한은 1990년 11월 20일 베를린에서 범민련 결성을 선포하였다. 3자회담의 결의에 따라 1990년 12월 27일에는 해외분부를, 1991년 1월 23일에는 남측분부를, 1991년 1월 25일에는 북측분부가 공식 출범하였다.

89) 로동신문, 1991. 1. 1.

2. 대외통일전선기관

북한의 대외통일전선업무는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총체적 계획 수립 및 관장 하에 국제부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한다. 대외정책 집행기구는 내각 외무성, 대외경제위원회, 외곽단체에서 대변하고 있다.

통일전선과 관련 되어 있는 주요 부분은 외곽단체이다.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를 들 수 있다.

대외문화연락위원회는 1956년 4월 3일 창설되었다. 당 국제부의 지도 하에 내각 외무성, 문화성 등과 긴밀한 협조 하에 세계 각지에 파견되어 선전 및 침투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이 조직은 정부기구가 공식적으로 담당 수행할 수 없는 민간지구 구축과 심리전 활동 등을 주로 담당하고 외국과의 정식 접촉에 앞서 민산외교, 친선단체교류, 문화활동, 예술공연 등 사전교류를 위해 기여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으로는 각종 친선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문화교류의 범위를 넘어 정치공작까지 겸하고 있으며 해외의 친선단체 및 조선지지연대성위원회, 김일성사상연구소조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⁹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는 1955년 5월 창설하여 재일동포들을 북한 지지자로 만들어 남한혁명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왔다.

김일성·김정일 관련 어록이나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자료들을 세계 각국어로 번역 출판하고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발간하여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선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 추구하는 외교 목표는 국제혁명역량의 강화를 통해 남조선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반제 반미공동전선의 형성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

90) 통일연수원, 1994 북한이해, 통일연수원, 1994, 80-81면.

미지를 손상시키고 북한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데 있다.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북한은 국제공산주의 체세력과 연대투쟁에 전력을 투구하여 왔다. 특히 제3세계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비동맹외교에 전력을 투구하여 남한의 국제적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해 미·일을 비롯한 서방권 국가들과 한국간의 이간을 획책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였다.⁹¹⁾

개정헌법 제17조에는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고 규정하고 민족해방과 반제국주의를 지지하는 주체사상의 민족주의적 속성을 활용하여 주체사상의 전과에 역점을 두어 왔다.

북한이 발행한 선전물에 의하면 1980년대 초까지 50개국 이상의 언어로 수천여종에 총 25억여 권을 발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외교역량은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급격하게 저하되었으며 제3세계권에서 서서히 그 지위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대외환경이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자 북한은 체제유지 차원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약화, 북·미, 북·일 관계 개선에 총력투쟁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를 고립시키려는 친북통일전선구축 공작은 대대적인 범민족대회 개최, 국제사회의 유력인사 초청 방북 등으로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91) 김갑철 외 공저, 북한학 개론 : 북한사회주의의 현재와 미래, 문우사, 1990, 397-398면.

제2절 대남통일전선전술의 추진 실태

북한은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대남전략의 목표를 시종일관하게 견지하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도의 하나로 대남통일전선전술을 한반도의 시대적 변화에 맞게 능동적으로 적용하여 왔다. 이를 협상제외에 의한 대남통일전선전술, 연방제통일방안에 의한 대남통일전선전술, 지하당 구축에 의한 대남통일전선전술로 구분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⁹²⁾

1. 협상제외에 의한 통일전선전술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를 기피하면서도 기회가 조성될 때마다 한국 내 혁명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남협상을 제의하여 왔다. 다시 말하여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야기된 격렬한 민주화운동을 역이용하여 통일전선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은 1945년 10월 10일 각 도당 책임일꾼대회에서 한 연설 ‘새 조국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를 통해 “새민주조선을 건설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가 공산당을 강화하고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며 광범한 대중을 공산당의 주위에 집결시키는 사업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⁹³⁾고 강조하였다.

1948년 3월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명의로 전조선정당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를 주장한 이래 1949년 6월 25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였다.

1949년 한반도에서 외국군이 철수하자 무력통일의 유리한 시점으로

92) 오일환, “북한의 통일전략으로서의 남조선혁명전략 분석 : 통일전선이론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연구 65, 한양대학교중소연구소, 1995.3, 218-225면.

93) 김일성, 통일전선사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114면.

파악하고 1950년 6월 7일 조국평화통일민주주의전선 명의로 평화통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남북정당 사회단체 대표자협의회를 제의하였다.

휴전협정 체결 이후에는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재건하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통치체계를 정비하면서 평화통일론을 주장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시설과 군사기반을 재건하는데 주력하면서 각종 평화적 제의로 대남통일정책을 수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체의 혁명역량 강화에 주력하여 왔다.

1954년 10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8차 회의 호소문을 통해 평화통일을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및 각계각층 대표자회의, 연석회의, 최고인민회의와 국회의 합동회의 개최를 제의하고 적극적인 대남 평화공세를 추진한 바 있다.

1956년 4월 제3차 당 대회에서는 남북한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소집, 남북한간의 접촉추진을 위한 상설위원회 설치, 쌍방 군대의 최소한 축소, 외국군대 철수, 남북한 정부대표가 참가하는 국제회의 소집 등 이른바 평화통일선언문을 제의하였다.⁹⁴⁾

1957년 2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 회의 연설을 통해서도 정전협정 폐기, 외국군대 철수, 병력 축소, 남북한 대표를 참가시키는 유관 국가 국제사회 개최 등을 제의하였다.⁹⁵⁾

1960년 초에는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협의회를 제의하였고 1960년 8.15일에는 연방제라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남측에 제의하면서 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적인 남북총선거 실시와 남한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과도적으로 남북한이 현재의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점차 남북한이 경제·문화·제도를 초월하여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자는 연방제

94) 김일성, 김일성선집 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518-522면.

95)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2권, 국토통일원, 1988, 71면.

통일방안을 내놓았다.⁹⁶⁾

1971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허담을 통해 8개 항목⁹⁷⁾의 통일방안을 제시하였고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1973년 6월에는 평화통일 5대강령을 내놓는 등 평화공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남침용 땅굴을 파는 등 혁명여건 조성과 복합적인 통일전선전술을 추구하여 왔다.

1973년 1월에는 전민족회의를, 6월에는 대민족회의를 제의하였으며, 1973년 8월에는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1975년 10월 당창건 30주년기념보고에서 김일성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민족대단결원칙에서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이룩해야 한다”⁹⁸⁾고 강조하였다.

북한이 1970년대 중반까지 반미통일전선구호를 지양한 것은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론에 편승하여 대미직접협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미간의 철군기도를 관철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1979년 10.26사태 이후 동년 11월 9일에는 ‘합작, 단결, 통일로 민족의 활로를 열자’고 주장하면서 남한사회의 정치혼란 및 국론 분열을 조장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 남북대화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체육회담,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 고위급회담으로 진척되었다.

1982년 2월 남북정치인 100인 연합회의, 1983년 1월에는 남북정당

96) 로동신문, 1960. 8. 15.

97) 북한이 제시한 8개 항목은 ① 미군 철수, ② 쌍방의 군대를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 ③ 한미조약 폐기, ④ 자유선거로 통일중앙정부 수립, ⑤ 정치활동 자유보장 및 정치범 석방, ⑥ 남북연방제 실시, ⑦ 통상, 경제협조, 문화, 예술, 체육, 서신교류, 인사 왕래, ⑧ 이상 문제협의를 위한 정치협상회의 소집 등이다.

98) 로동신문, 1975. 10. 10.

사회단체 연석회의, 1986년 12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 회의를 통해 “우리는 민족이 말살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조국강토가 미국의 핵전쟁 마당으로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서로부터 출발하여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히며 아울러 조선반도를 하루 빨리 핵무기가 없고 전쟁 위험이 없는 비핵지대로, 평화지대로 만들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제의하면서 남북한 긴장완화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1987년 11월에는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을 자행하는 화·전 양면 전술을 구사하였다. 또한 1988년 1월에는 남북연석회의, 1989년 신년사를 통해 연방제통일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대표하는 북남정치협상회의를 제의하였다.

1989년 9월에는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제의하였고, 1990년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남북의 자유왕래 실현 및 전면개방을 제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대표들의 협상회의 소집을 제의하였다.⁹⁹⁾

1990년대 이후 북한은 반미·자주화·연공·연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족단결론을 제시하여 왔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민족대단결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처음 거론되었고,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조국통일 5대 방침에서 다시 강조하였다.

이후 1991년 8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에 의해 구체화되었으며 1993년 4월 6일 조국통일을 위한 전 민족 대단결 10대 강령과 1998년 4월 18일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을 통

99)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조선로동당력사,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595면.

해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

북한의 민족통일전선전술은 지역적 범위에서 남북한 전지역을 포괄하고 해외교포까지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대상별 적용 범위는 남북한 제정당, 사회단체를 망라하여 계급 계층별로 북한의 노동자, 근로농민, 근로인테리, 청년학생, 병사들과 남한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 언론인, 종교인, 정치인 등 각계 각층의 포섭대상자 전원을 포괄하고 있다.

민족통일전선의 실천 내용은 연방제, 대민족회의, 남북총선거, 연석회의, 정치협상회의 등 남북한 합작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1991년 1월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 등 전민족대회와 대민족회의 정치협상 등의 이름으로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대남협상을 제의한 바 있다.

1991년 12월 1일에는 전민련 가맹단체를 중심으로 21개 재야단체를 규합하여 통일전선 연합체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을 결성한 바 있다.

전국연합의 결성에 대해 한민전 중앙위는 1992년 신년 메시지에서 통해 “오늘에 와서 애국적 민주세력이 단합해야 할 모체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다” 라고 지지입장을 표명하였다.

1992년 2월 제6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기본합의서 채택 발표 등에 응하면서 남북관계를 조정하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 9월 제8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3개 부속합의서 및 4개 공동위원회 운영개시일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1994년 신년사에서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전 민족 대 단결의 기치아래 한데 뭉쳐 거족적인 투쟁을 벌임으로써 올해에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범민련을 중심으로 한국 내 반정부세력과 연대하는 통일전선 투쟁을 더욱 강화시

켜 왔다.

1994년 4월 28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국에 대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제의하였다.¹⁰⁰⁾

1994년 7월 14일 조평통의 담화를 통해 “남조선 각계각층 인사들이 조문을 보내오며 평양에 조문단을 파견하려 하는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면서 “조문객을 동포애로 정중히 맞이하며 평양 체류기간 동안 신변안전 및 모든 편의를 제공 하겠다”¹⁰¹⁾고 발표하였다. 이는 조문 주장 주도 세력인 일부 야당의원과 재야인사, 한총련 등의 움직임이 통일전선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남한 내 반정부 투쟁을 자극하는 절호의 호재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1994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5차 범민족대회는 김정일 정권이 김일성 정권과 동일한 통일전선전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었다.

북한은 범민족대회를 통해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화합과 화해보다는 한국의 급진적 재야세력간의 균열을 심화시키고 대화 결렬의 책임을 남한 정부에 전가시키면서 북한인민들에게는 북한 당국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고 체제의 정치적 안정성을 공고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¹⁰²⁾

김정일도 1997년 8월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한국의 자본가이든 집권상층이든 관계치 말고 손잡고 나갈 것을 주장하면서 상층통일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시기 북한은 조평통과 범민련을 매개로 한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통

100) 로동신문, 1994. 4. 28.

101) 조선일보, 1994. 7. 15.

102) 최세경,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4, 155면.

일선선과 한민전과 전국연합을 다른 축으로 하는 사회대개혁 투쟁(조국 통일 3대헌장 관철 및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병행하면서 한국의 우익정권을 무력화시키는 통일전선공작을 일관하게 추진하였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의 반목과 대결 구도로부터 공존과 협력의 구도로 변화시켜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다. 즉, 체제 인정과 공존공영의 단계를 통해 통일을 지향하는 방식에 합의를 이룬 것이다.¹⁰³⁾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우리식사회주의 고수를 강조하면서 대남전략에는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 6.15공동선언에 나타난 우리민족끼리의 표현을 계기로 민족공조론을 정치담론화하면서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001년 1월 10일 개최한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에서 민족공조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북한은 2002년 10월 북핵문제, 2003년 신년공동사설, 2003년 5월 28일 조국전선 및 조평통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고함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왔다.

2006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을 강조하고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 것”¹⁰⁴⁾을 조국통일운동의 구호로 제시하였다.

2009년에는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가치를 높이 들고 파쇼독재를 쓸어버릴 것과 반통일 세력의 책동을 저지 파탄시키면서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

103) 김근식,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성 인정 : 통일접근 방식과 평화공존에 합의”, 아태평화포럼 제39호, 2000. 7. 15면.

104) 로동신문, 2006. 1. 1.

릴 것”¹⁰⁵⁾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당의 유일사상체제와 유일적 지도체제 확립에 집중하면서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한국 정부와 보수 인사에 대해 극렬히, 원색적인 비방 선전을 일삼는 등 통일전선전술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남북대화 자체를 공산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통일전선전술의 입장에서 파고들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북기본합의서를 한국 정부는 화해 협력을 위한 문서로 인식하고 있으나, 북한은 통일전선전술차원의 대남공작을 합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이 책임 있는 당국자 간 대화를 회피하면서 한국 내의 제정당 진보단체들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한국내의 용공조직들을 남북한 협상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의 주장에 동조시킴으로써 남한혁명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명목상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한국과의 각종 대남협상을 제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남협상은 당중앙위 비서국 산하 통일전선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대남협상은 당의 주도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북한의 제사회단체가 남북협상에 참여한다고 해도 결국은 당의 인전대로서 충실한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주적개념 비난, 국가보안법 폐지, 친북 세력 확산, 내부체제 결속, 국제혁명역량의 강화에 혈안이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진보적 사회단체들이 북한의 대중단체들과의 대화상대로 나간다면 많은 위험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이들 단체가 북한이 주장하는 논리를 두둔했을 경우 북한의 국내외적 선전효과를 얻는 반면에 한국정부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105) 로동신문, 2009. 1. 11.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연방제통일방안에 의한 대남통일전선전술

북한의 대남전략은 일괄타격방식의 선남조선혁명 후적화통일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하여 선통일 후평화의 위장평화전략에서 연방제통일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1956년 4월 제3차 당 대회에서 북한은 “조국통일독립의 위업을 달성시키기 위하여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민족적 통일단결을 강화하여 남북조선의 전체 애국적 역량을 단합하여 평화적 통일의 적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¹⁰⁶⁾고 강조하였다.

1960년 4.19혁명으로 통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자 ‘남북한 직접적인 협상을 위한 평화통일’을 표방하면서 남한을 적화통일 하기 위한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을 제시하고 위장평화공세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1960년 8월 14일에는 남북한의 ‘연방제’조직과 남북한 정부대표로 ‘최고민족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남북연방제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연방제 실시를 주장하면서 연방의 구성요건인 연방헌법, 연방의회, 연방재판소 등의 설치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이 제안한 연방제는 순수한 의미의 연방제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서 경제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남한을 흡수통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⁰⁷⁾

1961년 한국의 군사정부가 출범하자 공세적인 대남정책을 추진하면서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위한 선행혁명 후통일정책을 제시하였다.

106) 국토통일원,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II, 국토통일원, 1980, 541면.

107) 정성장, “북한의 통일 및 대남 정책 목표의 변화 연구”, 고향정치학회보 제2권, 1999, 168면.

당시 북한의 의도는 4.19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정치 사회적 혼란기를 틈타 남한혁명의 호기로 보고 통일정책의 변화를 통해 남한정권의 전복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71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허담을 통해 8개 항목¹⁰⁸⁾의 통일방안을 제시하였고,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973년 6월에는 평화통일 5대강령을 내놓는 등 평화공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남침용 땅굴을 파는 등 혁명여건 조성과 복합적인 통일전선전술을 추구하였다.

1979년 1월 23일 북한 측은 조전의 성명을 통하여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전민족대회를 소집할 것을 제의하였다.¹⁰⁹⁾

1979년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이 가속화되자 10.26, 12.12사태 이후 한국사회의 교란을 목적으로 1980년 초부터 남북한 총리회담을 제의하면서 정치협상회의와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된 전민족회의 소집을 되풀이 하여 왔던 것이다.

1980년 10월 10일 제6차 당 대회에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일성은 남북동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구성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남북한 지역정부를 지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사회의 민주화,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당을 포함한 정당 사회단체들의 합법화, 반체제 반정부 인사 석방, 북미

108) 북한이 제시한 8개 항목은 ① 미군 철수, ② 쌍방의 군대를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 ③ 한미조약 폐기, ④ 자유선거로 통일중앙정부 수립, ⑤ 정치활동 자유보장 및 정치범 석방, ⑥ 남북연방제 실시, ⑦ 통상, 경제협조, 문화, 예술, 체육, 서신교류, 인사 왕래, ⑧ 이상 문제협의를 위한 정치협상회의 소집 등이다.

109) 민병천, 북한공산주의, 대왕사, 1983, 508면.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놓았다.

이는 마치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두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통일전선의 차원에서 남한사회의 민주화를 운운하며 동조세력의 규합을 통해 통일전선전술에 의한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피하였던 것이다.

1987년 7월 23일 조선반도에서 단계별 다국적 무력감축협상을 제의하였다.¹¹⁰⁾ 주요 내용은 남북한 병력을 단계별로 축소한 후 1992년부터 10만 명 이하의 병력 유지, 평화지대건설, 다국적 군축협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88년 2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가속화되자 북한은 남북통일논의의 개방화에 따라 인민민주주의노선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반도 공산화혁명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1980년대 북한은 남북대결관계 속에서 접촉과 교류를 확대하는 통일전선을 추진하면서 남한 혁명역량을 축적시켜 결정적 시기가 도래할 경우 외부적 공세, 군사적 공세를 통해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이룩하겠다는 통일전선전술을 추진하여 왔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합작과 교류의 실현 문제는 곧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② 광범한 정치세력과 각이한 집단의 접촉을 보장하여 정치협상을 이룩하는 것이다. ③ 남한 국민 속에 반미의식을 주입시키고, ④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남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⑤ 남한 사회의 부조리를 들추어 집권층을

110) 김일성,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조선중앙년감,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104면.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게 하기 위한 선전 선동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⑥ 남한 국민의 계급의식을 고취시키고, ⑦ 미국과 평화협정 해결을 촉진하며, ⑧ 북한공산집단의 주도하에 통일문제 협상을 유도하려는데 있다.¹¹¹⁾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북한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도 일련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0년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를 주장하면서 연방제통일의 점진적 완성이라는 논리적 변화를 보였다. 또한 1991년 신년사를 통해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장차 중앙정부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¹¹²⁾

북한은 남과 북이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지 않는 원칙의 연방제 방식을 실현하고 장차 중앙정부의 기능을 강화하여 통일을 점진적으로 완성할 것을 주장하면서 남북한 자치정부에 일정기간 외교 및 국방권을 부여하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제방안을 제의하였다.

북한은 남북연방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민족회의나 정치협상회의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즉 남북문제와 대민족회의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이중, 삼중의 통일전선 형성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남북연방제의 기구로써 쌍방 지도층의 대표로 구성된 최고민족회의라는 상층부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반면에 60-70개 정당, 해외교포를 포함한 사회단체 대표에서 각 20명씩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대민족회의 또는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여 하층부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 전술적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결국 대민족회의라는 하층부 통일전선을 선행시킨 후 연방제라는 상층부 통일

111) 김현국, “북한 대남전략 전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4, 41-42면.

112) 양호민 외 공저,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 한반도 통일의 현실과 전망, 도서출판 나남, 1992, 41-42면.

전선을 이루어 북한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이다.¹¹³⁾

1997년 8월 김정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논문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과 고려연방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조국통일 3대 현장’으로 규정하고 통일 유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민족자주원칙 견지, 외세 배격, 민족 대단결 기치 아래 단결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며 북한 주도의 통일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1998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한국은 연북화해정책을 취해야 하며 휴전선일대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장벽을 제거하고 반공법,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정일은 1998년 4월 18일 남북 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50주년 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에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¹¹⁴⁾로 강조하였다.

1999년 4월에는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을 발표하였다.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은 첫째,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둘째,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결해야 한다. 셋째,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다섯째,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내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연대와 연합을 강화한다¹¹⁵⁾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연방제 주장은 직·간접적으로 한반도를 북한식으로 통일하기

113) 유동열, 남북통일론, 법문사, 1994, 186-189면.

114) 김정일,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로동신문, 1998, 4. 29.

115) 통일부, 통일문답 1999, 통일교육원, 1999, 64-65면.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하여 한국 내의 용공세력을 강화하여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고 국론분열을 야기시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유도한 다음 반공정권을 연공정권으로 대체시켜 적화통일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0년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명목상 6.15공동선언문을 통해 제기하였으나 이는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의 과도적 단계로 결국 ‘높은 단계의 연방제’ 실현을 위해 한국을 통일 논의에 끌어들이기 위한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으로 대내적으로 결속을 유지하고 통일전선전략을 가속화하려는 의도가 있다¹¹⁶⁾고 판단된다.

2005년 한민전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반미통일운동에 총 매진할 것과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놓는 전환의 해로, 미군 철수의 원년으로 빛나게 장식 할 것¹¹⁷⁾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최근 북한은 조국통일 3대헌장에 입각하여 반외세·반제·반미자주화투쟁(주한미군 철수투쟁), 민족대단결투쟁, 연방제통일투쟁 등의 대남혁명통일노선을 통해 전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을 부정하고 이를 분단고착화방안으로 매도하면서 연방제통일방안 전면지지, 통일의 선결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한국사회의 민주화 등을 내세우고 감상적 통일론과 민족공조론을 확산시켜 무분별한 친북사조와 연공연복의식을 유포시키고 있다.

그들은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기본방침으로 남한혁명의 주되는 대상인 주한미군 철수 투쟁에 전력을 투구하고 남한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반파쇼민주화투쟁 전개, 남한의 인민정권수립 후 북한과 단합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해 나갈 것을 추구하고 나섰다.

116) 박승춘,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략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 68-69면.

117) 한민전 중앙위,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 한민전, 2005. 1. 1.

3. 지하당 구축에 의한 대남통일전선전술

지하당 전술은 통일전선전술과 함께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기본적인 전술이며 통일전선전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김일성은 현 정세와 당면 과업에서 “오늘 남조선에서 전투적이고 탄력성 있는 맑스 레닌주의 당을 꾸리며 그 영도적 역할을 높이는 것은 혁명운동의 발전을 위한 절박한 요구입니다. 남조선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원수들을 반대하는 실천적 투쟁을 통하여 당 대열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당 조직들을 투쟁 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혁명적 핵심들로써 질적으로 꾸려야 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하당 각급지도부 단위로 수행하는 통일전선공작은 기성단체들과의 제휴공작과 신규단체의 조직·결속, 그리고 2개 이상의 여러 단체와 연합을 실현하는 연합전선형성공작 등으로 분류된다.¹¹⁸⁾

첫째, 기성단체와의 제휴공작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있고 항시적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성을 기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성단체는 관제어용단체, 자연발생적 군중단체, 재야단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 실현방도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각 정당·사회단체를 상대로 한 통일전선공작은 지하당 각급지도부의 전문공작소조에 전담하여 진행한다.
- ② 대상 정당 혹은 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선공작과 외선공작을 잘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정세변화에 따른 신축성 있는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118) 김용규, “북한의 통일전선 공작전술”, 공안연구, 공안문제연구소, 1997. 8, 21-24면.

④ 대상조직의 특성에 맞게 공작상대를 기술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⑤ 제휴관계가 형성된 정당·단체와는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다져나가야 한다.

둘째, 신규단체를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이를 확대시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지하당이 정당·단체에 망라되지 않은 미조직 군중들을 신규단체의 조직으로 흡수한다면 일거에 수많은 군중들을 전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중단체의 조직사업은 ① 새로운 군중단체를 합법적 단체로 조직, ② 광범한 군중이 망라한 큰 규모의 단체 조직, ③ 진정한 계급적 이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적 단체 조직, ④ 각 계층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조직해 나갈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규단체의 조직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기층민중 속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모든 지역부문 단위에 집중적으로 조직하며, ② 지역실정에 맞게 합법·반합법, 대소규모의 군중단체를 병행 조직하며 계층별 군중단체와 통일전선체적 군중단체를 밀접히 배합하여 조직해 나갈 것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① 합법적 활동무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모든 단체가 북과 연계되지 않고 현지에서 자생한 조직인 것처럼 잘 위장해야 한다. ② 생산적 지역적 단위별로 조직하되 중요 요충 지대로부터 집중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③ 계모임과 같은 세습적 친목단체에도 소홀히 하지 말고 단 한사람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조직에 적극 망라시켜야 한다. ④ 군중단체를 조직할 때에는 발기인 모임을 통해 먼저 핵심진지를 튼튼히 꾸리고 회칙, 강령, 선언문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갖춘 토대위에서 결성모임을 갖고 정식 선포하는 형식으로 조직한다. ⑤ 결성 초기의 규모는 너무 비대하지 않게 차후 개별적 가입절차에 따라 조직을

확대시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 내부에 북한을 지지하는 지하당 조직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노동당의 지도노선을 따르는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노동계급의 당을 조직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진하여 왔다.

해방이후 1975년 이전까지는 무력통일준비기와 한국전쟁, 전후복구, 폭력혁명시도, 남북대화시기 등을 거치면서 대남공작의 전성기와 침체기를 모두 경험한 바 있다.

특히 김정일이 대남공작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시작한 1975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시기별로 통일전선투쟁과 우회침투공작 강화, 자주민주통일투쟁과의 유기적 결합, 대화공세 및 통일투쟁선동과 대남유화국면 등에 편승하여 대남공작기구를 개편하고 김정일 중심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토대공작 중심에서 지도핵심공작 위주로 공작방향을 선회하였다.

해방 후 현재까지 북한이 전개한 지하당 구축 및 대남공작 실태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 이전 시기에는 한국 내 단독정부 수립 반대, 상층부 통일전선 형성, 유격활동 전개, 태업 및 전복 활동 강화, 좌익계 포섭 및 공산주의 합법 활동 토대를 구축하고 남노당 사업지도 강화 성시백을 공작원으로 남파하는 등 비합법적 대화와 서신공작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한국전쟁 시기에는 유격부대 근거지 확보 및 제2전선 형성, 기존의 남노당계 조직 복구 확대, 한국사회의 혼란 야기 및 정부 고립을 강화시키는 한편 합법, 비합법 폭력공작을 구사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다.

특히 1950년대 통일전선 공작은 재북통일촉진협의회를 통한 위장평화공세를 집중적으로 추구하여 왔다.

북한이 강제로 납북시킨 한국의 각계 저명인사들은 약 8만 4천여 명에 달하였으며, 대표적인 인사들로는 김규식, 안재홍(전 서울시장), 조소

양(사회당 당수, 국회의원), 엄항섭(김구의 비서실장), 국회의원 오하영, 윤기섭, 김효석, 원세훈, 김용무, 김동원, 박철규, 신성균, 조옥련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이용한 위장평화공세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북한은 오히려 이들을 반정부 내란음모 사건으로 몰아 엄항섭, 조소양, 윤기섭, 강상덕 등 24명을 재판 없이 처형하고 신성균, 조옥련, 최영호, 이주형, 이만금, 박동환 등 20여명을 북부 산악지대로 추방한 바 있다.

1960년 4.19 혁명을 계기로 북한은 대남공작기구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남노당계 잔존세력과의 연계를 유지하면서 지하당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결정적 시기 조성에 혈안이 되어 왔다.

또한 지하당 조직을 강화하면서 공작원들에 대한 개별 임무를 부여시키고 장기간 비노출 활동의 활동을 전개하면서 육상·해상 배합전투 훈련을 강화하였다.

1961년 9월 11일 제4차 당 대회에서는 혁명적 당의 지도 아래 노동동맹을 정점으로 한 반미구국통일전선형성이라는 ‘남한혁명론’¹¹⁹⁾을 채택하고, 폭력적 방법에 의한 남조선혁명의 수행, 혁명의 참모부인 당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1964년 2월 김일성은 당 중앙위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을 제시하였고 1964년 3월에는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1966년 10월 당 중앙위 제4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남공세를 추진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대남공작 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대남공작원 양성기지

119) 이상민 외, 21세기의 남북한 정치, 한울, 2000, 387면.

인 695군부대를 비롯하여 전국 도처에 500여개 특별 초대소(비밀 안전 가옥)를 설치 운영하였다.

1964년 3월 15일에는 통혁당 서울시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김종태, 김질락, 이진영을 중심으로 민족해방전선과 이문규, 이재학, 윤상환 중심의 조국해방전선을 조직하였다. 또한 그 산하에 민족주의비교연구회, 60년대학사회, 새문화연구회, 청맥회, 학사주점 등 수십 개의 지하 씨클을 조직하고 조총련과 연계된 남조선해방전략당을 결성하는 한편 민주화운동에 편승하여 통일전선조직을 확대하였지만¹²⁰⁾ 결국 1968년 7월 이들 조직은 일망 소탕되었다.¹²¹⁾

1969년 국회위원 김규남 사건을 비롯하여 주민신고와 반탐 수사망에 걸려 적발된 사건이 수천 건에 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사태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혁명당이 파괴되자 북한은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울진·삼척 지구에 120여명의 무장공비를 침투시키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주요사건으로는 1960년 간첩 송중식사건, 1961년 간첩 황태성사건, 1962년 인민혁명당사건, 1967년 동백림사건, 1968년 통일혁명당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북한은 연고선 포섭공작 및 진보당계 포섭 등 상층 통일전선 형성을 강화시키고 우회침투공작을 전개 하는 등 반제반미 구국통일전선, 반파쇼 민주전선연합으로, 결정적 시기 조성, 유격전술 전개, 남북대화 이면에 지하역량 강화, 혁명기지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

1970년 11월 제5차 당 대회에서는 한국 내부에 통일혁명당이 조직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통일혁명당이 남한 혁명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

120) 김용규, *소리없는 전쟁*, 원민출판사, 1999, 13-66면.

121) 북한은 1969년 8월 25일 통일혁명당이 재건되었음을 공포하고 당 규약, 강령,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고 있다고 공식화 하였다.¹²²⁾

북한은 새로운 공작 환경을 조성하고 통일혁명당을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각급 통일전선조직과 대중조직 건설 및 인민군을 강화하여 4대 군사노선을 관철하여 만단의 전투준비태세를 완성해 나갈 것과 남한의 반정부 투쟁을 고무·추동하여 군사정권을 고립·약화시켜 혁명의 사회적 여건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¹²³⁾

김일성은 “통일적 맑스 레닌주의 당, 노동계급의 당으로서의 통일혁명당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혁명투쟁 속에서 나오게 되었다...통일혁명당 선언과 강령에서는 당의 지도이념이 맑스 레닌주의적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당의 최고 목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며 당면 목적은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와 파쇼 통치를 반대하는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세우며 나아가서 민족의 희망과 염원인 조국 통일의 대열을 성취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통일혁명당이 내세우고 있는 투쟁 목표와 투쟁 강령은 남조선 사회 경제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와 각계각층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고 있다.”¹²⁴⁾고 주장하였다.

1975년 김정일이 대남사업을 총괄지휘하기 시작한 이후 북한은 청년 학생들과 재야세력들의 반정부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에 적극 동참하여 한국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한 반파쇼민주화 투쟁에 혁명여건조성의 초점을 맞추었다.

김정일은 6개월간의 대남사업 집중검열을 통해 대남공작에서 기본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혁명적 조직건설에 가족 당, 연고 있는 친인척

122) 통일혁명당은 유명단체로 마치 한국 내부에서 북한 체제를 지지하고 남한 혁명을 지도하는 지하당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한국 정부를 교란하고 동조세력 규합을 위한 심리전의 한 방법이다.

123) 신흥길, 김정일과 대남공작, 북한연구소, 1996, 198면.

124) 도서출판 돌베개, 북한 조선로동당 대회 문헌집, 도서출판 돌베개, 1988, 319면.

그룹 조성, 오가잡탕조합으로 전락하였고 간부들의 독단성, 독선주의, 관료주의가 대남사업을 망쳤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지난날 대남 공작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지도핵심공작을 새롭게 구축해 나갈 것을 과제로 내세웠다.

김정일이 새롭게 제시한 대남공작 방침은 통일전선에 기초한 2:1 대남우위 역량을 확보하여 조직, 사상, 정치, 대외, 군사의 5대 집중포위공작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76년부터 1980년 초반까지 지도핵심을 준비하여 1980년대부터는 대남공작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주요사건으로는 1977년 3월 24일 11인조 간첩단사건, 1978년 거문도 간첩선사건,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1983년 10월 미얀마 아웅산 폭탄테러, 12월 다대포 무장간첩 침투, 1986년 1월 20일에는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모든 남북대화를 중단하였다.

1986년 6월 23일에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을 제안하고 정부명의로 발표하였다.

1985년 7월 27일에는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명칭을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하여 새로운 강령과 규약을 채택한 바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강령에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민족해방투쟁을 제일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주요 투쟁과제로는 반미자주화 투쟁, 반파쇼민주화 투쟁, 조국통일투쟁을 제시하고 당면 과제로 민족자주정권 수립, 민주정치 실현, 자주적 민족경제 건설, 국민생활 안정, 민족교육의 발전, 민족문화 건설, 참신한 사회기풍 수립, 자주국방 실현, 자주외교 실현, 자주적 평화통일 이룩 등 10개 항을 내세웠다.

1985년 8월에는 통혁당 목소리방송을 구국의 소리방송으로 명칭을 개

칭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전국 각 지역에 흩어진 지하조직을 수습하여 혁명역량을 재편하고 지하당을 대신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통일전선 구심조직을 구축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대결 속에서 접촉과 교류를 확대하는 대남통일전선전술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더구나 당 서열 26위의 이선실을 직접 남파하여 지하당 조직재건을 추진하고 청년학생들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광범한 계층 속에 침투하여 이들을 의식화 조직화 공작에 주력하여 왔다.

1980년대에 들어서 김정일은 대남공작의 주요한 전술적 방침으로 한국에서의 지도세력 확보, 대중운동·통일운동에 대한 정치·조직적 지도 보장, 사회혼란 조성을 위한 화전양면 전술을 제시하고 이에 입각한 네 가지 공작전선을 구축하여 왔다. ① 안전하게 지하당 조직공작 전개, ② 합법·공개적인 정치·사상 선전공세 전개, ③ 합법적 정치공세 전개, ④ 테러형식의 폭력공세를 전개하여 주로 전략적인 내상을 향해 목적, 의식적으로 테러를 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전국규모의 연합전선 형성에 주력하면서 각종 공동투쟁 조직 전개, 공개 합법적 통일전선공작을 추진하였다.¹²⁵⁾

주요사건으로는 1981년 제일동포 유학생간첩사건, 1982년 고성침투 무장간첩사건, 1983년 문산 임월교 수중침투사건, 다대포해안 간첩침투 사건, 정해권 및 김병주 간첩사건, 1985년 김철, 신광수, 안상근 간첩사건, 1986년 간첩이병설사건 등을 들 수 있다.

125) 1987년 6.10항쟁을 비롯한 현대계열사의 연대파업, 거재옥포조선소 총파업, 대우자동차 총파업으로 연대투쟁이 강화되면서 각종 좌파성향의 세력을 결집시켰다. 1987년 8월 19일 전대협 결성 이후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반미 자주화의 구호를 내세우고 화염병 투척 및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체제전복투쟁을 일관되게 주도해 왔다. 1979년 10.26사태로 말미암아 남한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자 1980년 4월 동원탄좌 유희사태를 시작으로 동국제강, 인천제철, 기아자동차, 대우어페럴 등 노사분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고 노동계 침투공작을 강화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혁명의 주·객관적 여건을 양양기 전술단계로 보고 하층통일전선을 극대화시켜 남한 체제 내에서의 반미 반정부 투쟁을 조성하여 소위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여건을 고조시키는 공세적·방어적 전술과 북한의 자체 역량 비축 및 대열정비를 위한 수세적·방어용 전술을 구사하는 양면전술을 구사하였다.

1989년 1월 21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이 결성되어 해방 후 최대 규모인 20여개 지역별, 부문별, 군중단체를 결집한 연합조직으로 출범하였으나 그 구성상 복잡성과 조직적 한계로 인해 8개월 만에 자동 해체되었다.

1989년 9월 8일 김일성은 국가수립 41주년 경축보고대회에서 “우리나라의 북과 남이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두 체도를 그대로 두고 두 자치정부를 연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여야 합니다”¹²⁶⁾라고 남북공존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화·전 양면전술을 배합하여 추진하여 왔다. 특히 통일전선 형성, 공작 동조자 포섭, 지도핵심공작원 양성 남파, 해외를 통한 우회침투 강화, 적화혁명 기반 구축,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민족대통일전선으로 한국사회의 민주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반파쇼 민주연합전선 구축으로 전환하고 남북대화 교류 추진, 대북 경각심 완화에 주력하였다.

또한 한국 민주화세력에 편승하여 각계각층 남북교류 및 통일전선세력 형성을 위한 정세 여건 조성, 보안법 철폐, 친북세력 제도권 진입, 미군 철수 여론 확대, 한반도 안보 공백 초래, 국론분열, 불만 획책, 지하 지도 핵심 공작원 남파, 민주화세력 포섭을 기도하였다.

126) 김일성, “주체의 혁명적 가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자”, 조선중앙년감, 1989, 조선로동당출판사, 1989, 29면.

민간차원의 접촉은 1989년 1월 1일 김일성 신년사를 통해 남북정치 협상회의를 제의하면서 남한의 4당 총재와 김수환, 문익환, 백기완 등 재야 원로 인사들의 방북을 초청한 바 있다.

1989년 제13차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전대협 등 남한의 주사와 단체들의 밀입북이 시작되었다. 2월 23일에는 전대협이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할 것을 공식 발표하였고, 3월 20일에는 황석영의 밀입북을 시작으로 3월 25일 문익환 목사와 유원호가 일본, 독일을 경유하여 평양으로 향하고 6월 6일 문신부를 비롯한 3명이, 6월 30일에는 임수경이 전대협 대표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특히 1990년 6월 서경원(전 국회의원)의 밀입북 사건(2박 3일간 북한 체류)과 김일성 영접 미화 5만 달러의 공작금 수령 등 현역의원 간첩 사건은 1969년 공화당 국회의원 김규남 이후 사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1990년 11월 20일에는 베를린에서 범민련 결성을 선포하였다.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를 통해 “범민련의 결성된 것은 북과 남, 해외의 통일역량의 간고한 투쟁을 통해 이룩한 귀중한 성과이며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운동을 확대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범민련 결성 이후 범민족대회¹²⁷⁾의 개최를 통해 연방제통일,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 옹호하는 등 친북반한투쟁을 전개하는데 주력하였다.¹²⁸⁾

2009년에는 총적 투쟁 목표로 우리민족끼리 이념의 우월성을 확보하고 6.15, 10.4공동선언 이행, 정부의 공안탄압 분쇄, 이00정권 퇴진, 반전평화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및 범민련의 조직·사상적 역량

127) 범민족대회는 북한이 위장평화공세의 일환으로 추진한 대민족회의의 변종이다.

128) 내외통신사, 북한실상 종합 자료집, 내외통신사, 1996, 410-411면.

을 강화시켜 나갈 것을 투쟁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강릉 및 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96. 9, 98. 6), 거제도 반잠수정 침투(98. 12), 북방한계선 침범으로 인한 연평해전(99. 6), 판문점 무력 시위 등을 자행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의한 남북경협의 추진에 편승하여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전선전술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주요 사건으로는 1989년 서경원사건, 1990년 간첩 서순택사건, 1992년 간첩 김낙중사건, 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사건, 범민련사건, 1995년 간첩 김동식사건, 1997년 부부간첩사건,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북한의 통일전선 공작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매개로 하는 공개 합법적 통일운동과 한민전, 전국연합을 다른 축으로 하는 사회대개혁 즉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는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벌이면서 보수 우익정권을 무력화시키는 공작으로 일관하였다.¹²⁹⁾

2000년 10월 21일에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출범시키고 투쟁 강령과 규약 발간물 등을 통해 북한의 조국통일3대헌장 등을 미화 찬양하면서 북한의 통일노선을 수용하고 이를 지지선동 하는 한편 2005년 말부터는 친북성향 단체에 정풍운동을 주도하여 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 북한은 ‘우리민족끼리’의 통일담론을 유포시키고 민족공조를 주장하면서 2001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우리민족끼리를 공식 발표하였다.

2003년 8월 1일에는 한민전 구국의소리방송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으나, 2004년 구국전선을 통해 한민전 신년메시지를 발표하고 남한 내

129) 연합뉴스, 북한용어 400선집, 연합뉴스, 1999, 398-399면.

의 주요사건이나 시기별 투쟁지침을 인터넷 사이트 ‘구국전선’을 통해 하달하여 왔다. 2005년 3월에는 한민전을 반제민족민주전선으로 명칭을 개칭하였다.

북한은 정부의 지속적인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을 포기하지 않은 채 대남침투공작을 전개하여 왔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995년 10월 17일 1사단 무장간첩 침투사건, 1997년 9월 15일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1998년 6월 7일 속초 및 동해지역에 유고급 잠수정 침투사건, 2006년 정수평·정경학·일심희·강순정 간첩사건, 2008년 8월 원정화 간첩사건 등을 들 수 있다.

2007년 9월 16일에는 한국진보연대를 공식출범하고 “민중해방의 새 세상을 구현하고 자주와 평등, 평화와 통일의 새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민중이 총궐기하여 비정규직철폐, 한미FTA저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투쟁”¹³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1,500여개의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광우병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촛불시위를 주도하여 왔다.

제17기 한총련도 2010년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고 2012년 자주적민주정부 수립, 통일강성대국 건설을 향해 총진군해 나갈 것을 총기치로 내세웠다.

북한은 6.15공동선언 이후 지난 10년간 남북유화무드로 조성된 합법 공간에 편승해 남북대화 및 우리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방북초청을 통해 상층통일전선구축에 주력하고 학술, 종교, 언론, 체육, 문화 등 각 분야의 민간급 남북교류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방북자들을 대상으로 중·하층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여 우리체제 내 대북안보의식을 무력화시키

130) 한국진보연대, “한국진보연대의 역사적인 출범을 선언한다”, 한국진보연대, 2007. 9. 16.

고 친북공조를 조성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둔바 있다.¹³¹⁾

최근 북한은 우리민족끼리의 통일담론을 유포시키고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한미공조배격, 조국통일3대헌장에 입각한 통일운동의 조직화·대중화하기 위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하층통일전선에 주력하고 상층통일전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합법적이고 우회적인 대남침투공작과 대남유화전술을 구사하여 남한혁명의 결정적 시기 조성에 혈안이 되어 있다.

131) 유동열, “공세적 대남공작으로 강성대국 실현(적화통일)의 여건 조성”, 북한, 통권 457호, 북한연구소, 2010. 57면.

제5장 결론

지금까지 북한이 추진하여 온 대남통일전선전술의 실상 및 그 전개양상을 분석 평가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통일전선전술은 공산주의자들이 당세를 강화하고 혁명과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전술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적용하였고, 혁명의 퇴조기나 상승기를 막론하고 정권탈취 이전 시기부터 혁명승리 이후에도 공산주의의 종국적 목적이 달성되는 마지막 단계까지 시종일관하게 견지하여 왔다.

북한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경험한 통일전선전술을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 접목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대남통일전선전술은 전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위한 대남전략의 실천적 수단으로 한국 내 지하당을 구축하고 친북, 좌익세력을 확대 강화하여 대한민국 정권을 타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식 통일을 달성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혁명의 주력군을 육성시킴과 동시에 주력군을 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주력하여 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하층통일전선 형성에 주력하면서 상층통일전선과의 유기적 결합으로 반미구국통일전선, 반파쇼민주연합전선,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다양한 협상체의, 연방제통일방안, 지하당구축에 등에 의한 통일전선전술로 남한혁명의 유리한 여건 조성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전 시기에는 조국전선, 조평통 명의로 남북정당사회단체 대표자협의회를 제의하고,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면서 한국 내 단독정부 수립반대, 상층부통일전선 형성, 유격활동 전개, 체제전복활동 강

화, 좌익계 포섭 및 공산주의 합법활동을 토대로 한 남노당 사업지도 강화, 합법 및 비합법 공작을 중점으로 추진하여 왔다.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는 제정당 사회단체대표자협의회, 연석회의, 최고인민위원회와 국회 합동회의 개최, 남북연방제안 등을 제의하고, 대남공작기구의 개편, 반미구국통일전선형성, 통혁당 창당 등 연고선 포섭공작 및 상층통일전선 강화, 우회침투공작 강화 등 반제반미구국통일전선, 반파쇼민주연합으로 지하혁명역량 강화, 혁명기지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

1970년대에는 7.4 남북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전민족회의, 대민족회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 남침용 땅굴을 파는 등 혁명여건 조성 및 복합적인 통일전선전술을 추구하였다.

특히 김정일이 대남공작업무를 관장하면서부터는 과거의 연고자 중심 공작에서 지도핵심공작으로 공작방향을 선회하여 재야세력의 반정부 투쟁 및 반파쇼민주화 투쟁에 매진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서는 100인 연합회의,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제의하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혁당을 한민전으로 개칭하고 대남 3대투쟁 과제로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투쟁을 제시하고, 대남공작의 전술적 방침으로 한국에서의 지도세력 확보, 대중 및 통일운동에 대한 정치·조직적 지도 강화, 사회혼란을 위한 화·전 양면전술을 추진하여 왔다.

1990년대에는 민족대단결론,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대민족회의, 범민련 창설, 조국통일 3대원칙과 고려연방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규정하고, 외세배격 민족대단결의 기치 하에 북한 주도의 통일의를 천명하였다.

또한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을 제시하고 통일전선 형성, 동조자 포섭, 지도핵심공작원 남파, 해외를 통한 우회침투 강화, 적화혁명 기반구축, 조국통일의 기치 아래 민족대통일전선으로 한국사회의 민주화, 반미구국 통일전선을 반파쇼민주연합전선으로 전환하여 남북대화 교류 추진, 대북 경각심 완화에 주력하였다.

2000년 이후 북한은 ‘우리민족끼리’의 내세우고 ‘민족동조론’을 정치 담론화하면서, 조국통일 3대현장에 입각한 반외세, 반제, 반미자주화투쟁, 민족대단결 투쟁, 연방제통일투쟁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시대에 대남통일전선전술의 추진은 김일성시대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혁명역량 강화에 청년학생 및 지식인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도핵심공작을 통한 혁명지도부 강화, 한국 국민들의 의식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왔다.

천안함사건 이후 북한은 또다시 ‘서울 불바다’ 운운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향후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술은 그동안 축적하여 온 합법적 영역과 비합법적 영역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부각시켜 한·미 관계 및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면서 각계각층을 대남통일전선에 결속하여 조직·사상적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남한 혁명적 여건 조성 및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대남통일전선전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우리 내부의 허점을 보이지 말고 이를 최소화하면서 침투기회를 사전 봉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남통일전선전술을 분쇄해 나가기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남통일전선전술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위험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대남통일전선전술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고 그 파급효과를 제어하기 위한 사전조치들을 선행시키고 필요한 자료들은 과감하게 국민에게 공개하여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우리 내부에 구축되어 있는 지하당 세력 및 통일전선조직체를 와해시켜 나가야 한다.

월간조선 2002년 5월호에 따르면 “우리 내부에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비노출 직업혁명가는 1만 2,000여명,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수준에 있는 동조세력이 32만여 명”으로 밝혀졌고, “이세상이 확 뒤집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불만세력으로 좌파에 가담할 수 있는 잠재적 좌파세력이 400여만 명으로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¹³²⁾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들을 대변하여 투쟁하고 있는 좌익, 좌파세력들의 친북적이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현재 친북운동권 세력들은 김정일의 영도력과 북한의 강성대국론, 주체사상, 조국통일3대헌장, 우리식사회주의 등을 전파시키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현 정권을 사대매국정권 등으로 매도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북미평화협정 체결, 연방제통일 등을 촉구하면서 반미, 반정부 투쟁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통일운동과 남북교류협력을 빙자하여 사회의 저변에 통일전선형

132) 배진영, “한국의 좌파세력 집중연구”, 월간조선, 2002년 8월호, 조선일보사, 2002, 140-154면.

성을 기도하면서 과격한 폭력시위 등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보안당국의 엄격한 사법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안보의 위해 또는 취약요소를 최소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이기주의적 성향, 특권의식, 불신과 대립, 부정부패 등 취약점 및 불안요소들을 과감하게 치유하고 이를 최소화시키면서 공동체적 연대의식 속에서 국가발전의 혜택을 골고루 향유해 나갈 수 있도록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대남통일전선공작을 사전에 차단하고 김정일 독재 권력을 고립시킬 수 있는 역통일전선공작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남통일전선전술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국민의 조직·사상적 결집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함사건과 같은 제2, 제3의 침략적 도발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찰의 치안역량 및 군 전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이데올로기 교육을 통해 이론적으로도 공산주의자들의 주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강박할 수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함양시킴과 동시에 북한의 사조에 동조하는 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여섯째, 경찰의 보안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안경찰의 조직화, 정예화, 기동화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① 조직적 측면에서 보안수사대를 비롯한 경찰서의 보안 부서를 원래의 보안과 등으로 환원조치 하여야 한다.

② 보안경찰의 정예화를 통해 보안역량을 강화하고 보안경찰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③ 보안경찰 장비를 현대화, 기동화 하여 대간첩작전 및 보안사범의 검거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물적 측면에서 국가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보안경찰의 수당 및 활동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 나가야 한다.

일곱째, 향후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술은 체제변혁에 필요한 촉발요인을 유도하기 위해 테러, 폭파, 요인납치 등 투쟁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I. 국내 문헌

1. 단행본

강인덕, 공산주의와 통일전선, 극동문제연구소, 1980.

국방연구원, 중장기 위협 평가 및 국가안보전략, 국방연구원, 2000.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정책연구 제43호,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국토통일원,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II, 국토통일원, 1980.

-----, 북한 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2권, 국토통일원, 1988.

김갑철 외 공저, 북한학 개론 : 북한사회주의의 현재와 미래, 문우사, 1990.

김민하, 현대사회와 이데올로기, 대왕사, 1982.

김용규, 소리없는 전쟁, 원민출판사, 1999.

김운영, 통일전선의 전략과 전술, 도서출판 아침, 1988.

김창순, 북한총람, 북한연구소, 1983.

남북문제연구소, 북한의 대남전략 해부, 남북문제연구소, 1994.

내외통신사, 북한실상 종합 자료집, 내외통신사, 1996.

대세계백과사전 편집위원회, 대세계백과사전 1, 태극출판사, 1972.

도서출판 돌베개, 북한 조선로동당 대회 문헌집, 도서출판 돌베개, 1988.

- 민병천, 북한공산주의, 대왕사, 1983.
- 박편우 편,(모택동) “중국혁명과 중국 공산당”, 사회계급론, 백산서당, 1985.
- 박채용, 북한의 주체사상과 통일정책, 문우사, 1991.
-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북한연구소, 1999.
- _____, 북한총람, 북한연구소, 1983.
- 서울대공전술연구소, 북괴의 통일전선공작전술, 서울대공전술연구소, 1989.
- 신평길, 김정일과 대남공작, 북한연구소, 1996.
- 양호민 외 공저,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 한반도 통일의 현실과 전망, 도서출판 나남, 1992.
- 연합뉴스, 북한용어 400선집, 연합뉴스, 1999.
- 유동열, 남북통일론, 법문사, 1994.
- _____, 한국좌익학생운동의 이론과 실제, 민족정론사, 1995.
- 이상민 외, 21세기의 남북한 정치, 한울, 2000.
- 조태훈 · 이왕재, 공산주의 이론과 실제 비판, 창문각, 1982.
- 중앙정보부, 대남공작관계 용어집, 중앙정보부, 1979.
- 통일부, 통일문답 1999, 통일교육원, 1999.
- 통일연수원, 1994 북한이해, 통일연수원, 1994.
- 한용원, 공산주의와 급진주의, 박영사, 1986.

2. 논문

- 강성윤, “북한의 통일전선과 남한혁명론”, 안보연구 1987년 12월호,

-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1987.
- 강인덕,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나타난 통일전선의 유형과 북한의 통일전선전술과의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76.
- _____, “통일전선전술과 통일문제”, 통일문제연구, 국토통일원, 1990. 12.
- _____, “북괴의 대화전략과 통일전선전략”, 공군, 공군본부정훈감실, 1980.
- 김근식,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성 인정 : 통일접근 방식과 평화공존에 합의”, 아태평화포럼 제39호, 2000. 7.
- 김남식, “통일전선 전술과 대남전략”, 안보연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1982. 12.
- 김용규, “북한의 통일전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7.
- , “북한의 통일전선 공작전술”, 공안연구, 공안문제연구소, 1997. 8.
- 김재일,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4.
- 김해호,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5.
- 김현국, “북한 대남전략 전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4.
- 권운식, “북한통일전선전술의 성격에 관한 연구”, 국제과학문화연구소, 안보이념논집, 1990.

- 박승춘,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략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
- 백경남, “공산주의 통일전선과 그 실제”, 안보연구 제14호,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1984.
- 배진영, “한국의 좌파세력 집중연구”, 월간조선, 2002년 8월호, 조선일보사, 2002.
- 송경호, “김정일정권의 대남전략 및 추진상황”, 치안정책연구소, 2005 연구보고서, 2005.
- 안보문제연구원,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통일로 1989년 9월호, 안보문제연구원, 1989.
- 양점석, “북한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 · 전술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2.
- 오일환, “북한의 통일전략으로서의 남조선혁명전략 분석 : 통일전선이론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1995년 3월호,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1995.
- 유동열,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분석”, 공안연구 1998년 4월호, 공안문제연구소, 1998.
- _____, “공세적 대남공작으로 강성대국 실현(적화통일)의 여건 조성”, 북한, 통권 457호, 북한연구소, 2010.
- 이상호, “북괴의 통일전선전술에 대한 고찰”, 이데올로기 비판(1), 국제대학, 1982.
- 이성구, “김정일 정권의 대남정책 : 1994-2005”,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5.
- 정성장, “북한의 통일 및 대남 정책 목표의 변화 연구”, 고향정치학회

보 제2권, 1999.

최세경,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5.

황호숙, “통일전선과 민중조직”, 대학문화 1988년 2월호, 서울시립대학교, 1988.

II. 북한 문헌

1. 단행본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1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67.

_____, 김일성저작선집 2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_____, 김일성저작선집 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_____, 김일성저작선집 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_____, 김일성저작선집 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_____, 통일전선사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용어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3.

스탈린, 스탈린전집 상, 조선로동당출판사, 1949.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조선로동당력사,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평양사회과학원, 혁명에 관한 맑스 레닌주의 이론 및 전술에 대하여
1, 조선노동당출판사, 1965.

_____, 혁명에 관한 맑스 레닌주의 이론 및 전술에 대하여 2,
조선노동당출판사, 1965.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2. 논문

김일성, “주체의 혁명적 가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자”, 조선중앙년감, 1989, 조선로동당출판사, 1989.

-----,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조선중앙년감,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김정일,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로동신문, 1998.

Ⅲ. 외국 문헌

Degras, Jane. The Communist International 1919-1943. London : Oxford Univ. Press, 1956.

Mao Tse-tung, "Problems of war and strategy" in selected works, New York : International Publishers, 1954.

William Z. Foster, History of the three Internationals, New York : International Publishers, 1955.

Ⅳ. 기타

김일성, 신년사, 1975.

로동신문, 1960. 8. 15.

_____, 1975. 10. 10.

_____, 1991. 1. 1.

_____, 1994. 4. 28.

_____, 2006. 1. 1.

_____, 2009. 1. 11.

조선일보, 1994. 7. 15.

장철현, 북한의 통일전선사업부 해부 ③, <http://blog.daum.net/blog/hdn/ArticleContentsView.do?blogid>, 2010. 03. 17.

한국진보연대, “한국진보연대의 역사적인 출범을 선언한다”, 한국진보연대, 2007. 9. 16.

한민전중앙위,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 한민전, 2005.

책임연구보고서 2010-03

김정일시대 통일전선전술의 추진실태와 향후 전망

2010년 9월 30일 발행

발행인 : 이 중 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